

특별
증면호

3호 2008년 9월 1일

주간〈맞불〉의 새 이름

저항의

촛불

www.resistcandle.or.kr

반전 | 반신자유주의 | 노동자 투쟁

The Candlelight Resistance

‘다함께’(www.alltogether.or.kr)의 주간신문 〈저항의 촛불〉 /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243 우)110-612 /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 atgmail@nate.com

값 800원

사회주의노동자연합 구속자들을 석방하라

사노련이 ‘친북 이적’이라는 말은 거짓이다

정치적 의견의 자유 보장하라

러시아·그루지아 전쟁 이후



제국주의의 불안정한 질서

8~9면

알렉스 칼리니코프 논평

- 그루지아 전쟁이 보여 준 것

9면



민주당 전당대회와
오바마의 우경화

5면

북한 핵 불능화 조치
중단의 배경

7면

또 한번 길림길에 선 차베스

7면

수렁에 빠진 ‘테러와의 전쟁’

- 이라크 · 파키스탄

6면

경북대 이기웅 교수 특별기고

- 맑스주의와 언어 (II)

10면



더 나은 삶을 위한
주요 요구들

12~13면

〈저항의 촛불〉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저항의 촛불〉 온라인 기사

서평: 〈공습〉, 〈인터넷 권력의 해부〉
전쟁 속 끔찍한 공습의 역사와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다룬 요시다 도시히로의 〈공습〉, 인터넷 공간의 장점과 한계를 다룬 김상배의 〈인터넷 권력의 해부〉, 두 책에 대해 말한다.

.....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www.resistcandle.com

» 관련 기사 3면



인용해도 될까요?

“기통전자 비정규직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다.”

– 죽어가는 여성 노동자에 관심 없는 노동부 차관 정중수

“내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고,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라는 너무 많은 기대가 있었다.”

– 이제 와서 발뺌하는 이명박

“내년 되면 [추가] 3천[포인트]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명박, 지난해 대선 유세 때

“야 우리 3점이지. 그 머리 긴 놈이 랑 검은 티 입은 놈. 줄무늬 입은 놈”

“아냐 아냐. 우리 2점이야. 한 놈은 우리 꺼 아니야.”

– 한 촛불시위 참가자가 들은 백골단의 대화

“MB정권이 출범하며 747 공약을 했는데 그중 마지막 7은 올림픽에서 달성했다. 금메달 13개 따고 7대 강국 들어갔기 때문에”

– 한나라당 홍준표

“촛불집회가 계속되면서 (시민들이) 말로 해서는 말을 안 듣는다.”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윤희숙 활동가 담당 판사의 망언

“스님들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빨리 예수를 믿어야 한다.”

– 범불교대회를 겨냥한 우익 목사 장경동의 망언

“유한열 한나라당 상임고문의 국방부 통합전선망 남품 청탁 의혹 사건은 결국 … 생계형 범죄 … 가 사도우미의 밀린 월급조차 주지 못할 정도로 마땅한 수입이 없었 [다]”

– 궤변의 달인 <동아일보>

눈속임 뒤에 계속되는 공기업 민영화 재앙

정부가 일부 공항 매각과 기관 통폐합을 골자로 40개 공기업에 대한 2차 민영화 계획을 밝혔다. 이로써 민영화와 구조조정이 확정된 공기업은 79개로 늘었고 앞으로도 철도, 도로·항만공사, 대한주택보증 등을 포함해 20여 개가 추가될 예정이다.

촛불의 성과 덕분에 범위와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실질적인 민영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물·전기·가스·의료 등은 민영화에서 제외한다는 말도 믿을 수 없다. 국민 반발을 의식한 한나라당이 황급히 반대하는 바람에 잠시 유보됐지만, 상수도 민간위탁 법안은 다시 추진될 것이다. 정부는 소유권은 유지되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변명했지만 눈속임에 불과하다. 외국에서도 물 민영화는 대체로 운영권 민간위탁에서 시작됐다. 게다가 이미 지방 곳곳의 상수도 위탁이 진행 중이다.

1·2차 발표에서 빠진 전기 민영화도 마찬가지다. 8월 25일 폭

민영화를 ‘민간위탁’, ‘경영 효율화’로 이름만 바꿔 추진하는 이명박

로된 ‘에너지·자원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보면 정부는 민간업체 진입을 허용해 전기 소매 경쟁체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역시 민영화로 가는 디딤돌격인 조처인데, 요금 인상도 예정돼 있다.

이처럼 정부는 민영화 반대 여론이 집중된 몇몇 공공분야의 경

우 별도의 법이나 행정조처로 민영화 효과를 내려고 한다.

삼성경제연구소나 조세연구원조차 사실상 인정하고 있듯이 민영화가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는 검증되지 않은 가설일 뿐이다. 민영화가 경제 전반의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지도 의문이다. 재벌들이 잉여자금을 쌓

아놓고 투자하지 않는 것은 전체 경제의 수익률이 낮아서이지 규제나 인건비 부담 때문이 아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 인수에 이명박의 조카 이지형이 관여하고 있어 민영화가 ‘이명박 친인척 배불리기 아니냐’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막대한 세금으로 지어서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 인천공항을 투기자본에 저가로 매각하려 하자 노동자들은 ‘제2의 론스타 사건’이라며 투쟁에 나서고 있다.

노동부는 ‘현 정원 대비 5퍼센트 이상 인원 감축’을 산하 공공기관들에게 지시했고, 정부는 ‘구조조정 예고 공기업은 2년 이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이처럼 공기업 ‘선진화’ 공세는 무엇보다 노동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공공부문 정규직과 비정규직, 민간부문 노동자, 시민사회 진영이 함께 저항해야 한다.

정중남

이명박식 ‘저탄소 녹색성장’은 사기다

이명박은 광복절 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천명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미 지난 4월에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을 축소한 바 있다.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이란, 햇빛으로 생산된 전기를 시세보다 비싼 값에 정부가 사들여 태양광 발전의 보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뻔뻔스럽게도 뒤통수를 먼저 친 다음에 거짓말을 한 셈이다.

더욱이 최근엔 핵발전소 11기를 추가로 지어야만(현재 건설 중인 핵발전소를 제외하고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핵발전 비용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한국에는 핵발전소 20개가 가동중이며 8개를 새로 짓고 있다.

그러나 핵발전은 이윤에 눈이 먼 기업들조차 종종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미국의 핵 산업은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수십조 원의 빚 보증을 의회에 요청해서 월가의 눈총을 받고 있다. 대표적 자본가인 워렌 버핏은 검토 끝에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이미 1천3백만 달러를 투자한 핵 사업을 올 1월에 포기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의도적으로 발전소 건설 비용은 누락시킨 채 핵발전이 경제적이라고 거짓말한다. 게다가 고리 1호 핵발전소의 수명을 늘리는 데 설비 교체 비용이 1천억 원 이상 든 사실은 신규

건설 비용만 문제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다. 이렇게 수명을 연장한 핵발전소의 사고 확률은 훨씬 높아진다.

핵발전

이명박의 핵발전 확대 계획은 천문학적인 발전소 건설·유지 비용과 갈수록 비싸지는 원자재 값을 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할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또한 노무현이 핵폐기장을 건설하기 위해 부안 주민들을 탄압했듯이, 이명박 역시 핵발전소 건설을 위해 신규 부지의 지역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할 것이다.

따라서 위험한 핵발전이 아니라

풍력과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은 지난 5년 동안(2001~2006년) 0.1퍼센트 증가하는 데 그쳤을 뿐이다.(산업자원부, 2008년 1월 범부처 워크숍)

환경정책마저도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이명박의 시장논리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온실기체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더딘 것은 수익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생색내기식 소규모 투자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만큼 대규모 투자를 강제하려면 시장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노동자·서민과 민주주의의 적인 이명박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는 이유다.

김종환

국민연금마저 거덜내려 하는 2MB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박해춘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서 주식 투자 비중을 정권 임기 내에 현재 17.8퍼센트에서 40퍼센트까지 늘리고, 기업 인수 등에 투자하는 대체투자도 기존 2.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늘려 대우조선 매각이나 우리는 행, 산업은행 민영화에도 참여하고 월가에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만 해도 20조 원을 추가로 주식에 투자하려고 한다.

한국투자공사가 이미 메릴린치 투자 등으로 1조 원 가까이 손실을 내고, 정부 소유인 우리은행이 서브프라임모기지론에 투자했다가 8천억 원을 까먹은 상황에서 연금의 주식 투자 대폭 확대는 위험천만한 계획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미 이명박 정부는 상반기 주가 하락을 막는다며 국민연금을 주식시장에 쏟아부어 5~6월 두 달 새 4조 2천6백47억 원이나 평가 손실을 냈다.

수조 원의 공공 자산이 주식 부자와 투기 자본 등 1퍼센트 특권층의 재산 보호를 위해 허공에서 사라진 것이다.

위험천만

그러나 이는 삼성화재 임원과 우리은행 행장을 거친 자칭 ‘투자 전문가’ 박해춘 개인의 ‘오버’가 아니다. 사실,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확대 계획은 노무현 정부가 본격 시작한 작품

이다. 유시민이 박해춘을 공개 두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확대는 청와대의 이해관계로만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연기금의 ‘펀드(투기자본)’화는 신자유주의 프로젝트의 일부다.

왜 우리의 미래가 주식시장의 동향에 종속돼야 하는가. 왜 공공의 자산이 부자들의 자산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쓰여야 하는가. 왜 노동자들이 적립한

연금이 노동자를 구조조정하는 기업 사냥 행위에 쓰여야 하는가.

이명박은 기금 운용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잠재우려고 민주노총 등 가입자 단체들을 배제하는 기금운용위원회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연기금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금운용위원회 개혁이 시급하다. 또 기업주들에게나 도움이 될 펀드 조성 방식(적립식)의 연금 제도를 건강보험처럼 부과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촛불이 할 일이 여전히 많다.

김문성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탄압을 중단하라

공안당국은 8월 26일 오전,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 활동가 7명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소지·반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다른 한 명은 수배자의 처지가 됐다.

이명박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시장주의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공안 탄압을 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해 왔다. 사노련 탄압은 민주주의의 파괴가 좌파를 핵심 표적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적단체”, “국가변란 선전선동” 등의 단어들이 9시뉴스에 등장하는 것을 보고 있자면 역사의 시계가 1990년대로 거꾸로 돌아간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다.

촛불 운동에 민주노총 노동조합이 조직적으로 동참하고부터 사노련은 물대포와 백골단에 함께 시달리며 촛불을 함께 들어 왔다. 경찰 말대로 “사노련의 깃발이 촛불 집회에서 발견됐다.”

사노련이 제작·배포한 신문 등은 모두 촛불 운동의 주장을 공유했다. 사노련이 ‘촛불행동강령’으로 내세운 미친소 저지, 한미FTA 저지, 조중동 폐간, 비정규직 철폐, 물가인상 반대, 교육·의료 민영화 반대, 공기업 민영화 저지 등은 바로 촛불의 요구였다.

촛불의 요구

이밖에도 사노련은 그동안 노동자 투쟁에 적극 참여해 왔다. 사노련은 지난해 이랜드 노동자 투쟁을 비롯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 헌신해 왔다. 특히, 이번에 체포된 오민규 씨는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전 집행위원장이다.

오세철 교수는 1970~80년대 반독재 투쟁을 한 제자들의 영향을 받아 민주화 투쟁에 동참했고, 지금까지도 양심과 신념을 굽히지 않고 사회주의 운동을 해 온 원로 좌파 학자다. 오세철 교수는 “1987년에 나를 껴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한열(경찰의 직격 최루탄에 맞아 숨진 연세대 학생)이다. 이한열은 경영학과 86학번으로 내 과목을 들던 제자였다”고 회고했다.



오세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이처럼, 착취당하는 노동자 편에서 온갖 백안시를 무릅쓰며 활동한 이들이 박해받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명박과 공안당국은 사노련을 마녀사냥함으로써 촛불의 불씨를 짓밟고 조기 레임덕에서 벗어나는 데 이용하려 한다. 전국에서 불교도 20만 명이 모여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법회가 예정된 27일을 하루 앞두고 사노련 사건을 터뜨린 것이 이 점을 입증한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균 상임활동가의 지적처럼 이명박 정부는 “촛불집회가 좌파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변질됐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전체 운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사노련을 “본보기로 선택”한 것이다.

사노련에 대한 마녀사냥이 성공하면 이명박은 자신감을 얻어 좌파에 대한 탄압을 확대하며 신자유주의·친제국주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전 집행위원장

의 정책을 더 밀어붙이려 할 것이다.

사노련처럼 북한과 아무 관계 없고 오히려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급진 좌파 단체들로 탄압이 확대될 수 있다. <동아일보>는 “큰 제약을 받지 않은 채 활동해 온 극렬좌파단체들도 계속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며 탄압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전형적인 마녀사냥이니만큼 사노련을 방어하는 것은 촛불 진영 모두의 과제다. 이미 다함께, 민주노총,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진보적 사회단체들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사노련 방어를 나서기 시작했다. 8월 27일에 열린 사노련 탄압 반대 기자회견에 폭넓은 단체들이 참가했다.

촛불의 불씨를 짓밟기 위해 국가보안법이라는 더러운 무기까지 꺼내 든 이명박에 맞서 강력한 저항을 건설해야 한다.

8월 27일에 열린 사노련 탄압 반대 기자회견 —
민가협,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구속노동자후원회 등 폭넓은 사회단체들이 참가해 사노련을 방어했다

누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는가

경찰과 주류 언론은 사노련이 자본주의 폐지와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한다는 점을 공격한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며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라면 누구든 자신의 사상을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사노련 창립식에서 축사를 한 김수행 교수의 말처럼 “글 쓰는 것은 자유”이며, “그것을 갖고 이적단체라고 하면 완전히 학문의 자유랄까 양심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거스르고 있는 것은 바로 우파와 이명박 정부인 것이다.

보안수사대는 오세철 교수와 학문·사상의 자유가 부각되는 것이 부담스러워 교활하게도, 사노련이 촛불항쟁을 계기로 “행동으로 전환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끼리 견해를 교환하며 토론하는 것은 괜찮고 그런 견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는 당국의 입장은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우파가 이처럼 사상의 자유, 정치적 자유를 다시 노골적으로 부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지배자들과 그들의 이명박 정부가 강력하지 않고 오히려 취약하고 위기에 처해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자와 반자본주의자는 조금치도 위축되지 말고, 그러나 안전에 신경쓰면서 계속해서 조직 건설을 위해 분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민주적 자유권을 위해서도 투쟁해야 함은 물론이다. ‘민주 대 반민주 구도가 끝났다’, ‘민주화 이후’ 따위를 말하는 현학자들과도 또한 논쟁해야 한다.

오늘날 자본주의가 낳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경제 위기, 전쟁, 환경 재앙의 참혹한 현실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이런 모순 투성이의 자본주의를 폐지하고 대안 사회를 건설하려는 고민과 노력은 완전히 정당하다.

국가보안법의 본질이 드러나다

이번 사건은 국가보안법이 진정으로 겨냥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드러냈다.

‘친북’단체가 아니라, 북한 등 스탈린주의 국가를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반(反)노동자 계급적 사회체제로, 노동자 계급이 타도해야 할 반동체제로 규정”(사노련 홈페이지 ‘우리의 입장’)하는 단체에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한 것은 국제사회주의자들(IS) 사건 이후로는 거의 유례가 없던 일이다.

<동아일보>는 사노련이 “친북 성향의 단체가 아닌, 국제사회주의혁명을

폐하는 트로츠키주의자들”이고, “그동안 방치돼 온 극렬좌파단체 수사의 신호탄”이라며 탄압을 반겼다.

신호탄

그동안 남한 지배자들이 국가보안법으로 파괴하려고 한 것은 바로 친북이든 혁명적 반북이든 관계 없이 노동자 운동 속에서 착취와 천대, 부당함에 맞서 어렵사리 저항을 해 온 단체들이었다.

남한 지배자들은 이 점을 은폐하고

좌파 단체들을 손쉽게 마녀사냥하기 위해 북한 정권과의 연계나 친북사상을 핑계로 이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명백히 북한 체제에 반대하는 사노련에게 ‘이적단체’ 혐의를 적용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이 무엇을 겨냥하는지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이 점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과 겨안고 선물을 주고받았던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남한의 주체주의 활동가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한 모순에서 이미 드러났다.

1930년대식 신자유주의를 좌절시킨 투쟁

김용욱

1929년 미국 증시 폭락으로 시작된 대공황은 농업을 포함한 실물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역사상 최악의 생산 감소, 대량 실업, 소득 수준 하락을 낳았다.

1930년대 초 조지 오웰은 노동자들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다. “흠뻑한 젊은 탄광 노동자와 방직 노동자 들은 땀에 걸린 동물 처럼 갑자기 말문이 막힌 채 자신의 운명을 직시해야 했다. 그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노동이 당연하다고 교육받았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그들은 다시는 일자리를 얻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일자리를 잃지 않은 노동자들은 임금 등 노동조건이 크게 악화하는 것을 감수해야 했다.

정부들은 국가 재정을 사용해 대기업을 소유주들의 숨통을 터 주었지만 — 이른바 ‘부자들의 사회주의’ — 노동자 · 서민의 고통에는 자유방임 정책을 취하며 나몰라라 했다.

지배자들은 이것을 오늘날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동일한 근거로 정당화했다. 당시 미국 재무장관 앤드류 멜론은 이렇게 말했다. “[자유방임은] 체제에서 썩은 부분을 도려내기 위해서다. … 임금이 하락할 것이다.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도덕적인 삶을 살 것이다. 가격이 조정될 것이고, 기업가들은 뒤쳐진 사람들이 남긴 잔해를 주워 담을 것이다.”

그러나 1930년대 중반부터 일부 나라에서 이런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지배자들 중 일부는 노동자 · 서민을 쥐어짜는 것은 국내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 위기를 더 심화시킬 뿐이라고 생각했다. 또, 일부 나라들에서 노동계급의 대규모 투쟁이 벌어졌다. 당시 미국과 프랑스의 계급투쟁이 대표적 사례였다.

시장주의

1932년 민주당 대선 당시 훗날 ‘뉴딜’로 유명해진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실업률이 25퍼센트인 상황에서 시장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고 상대 후보를 비판한 철저한 시장주의자였다. 그의 생각은 노동자들이 정부의 작은 양보정책 — 전국 산업부흥법(NRA) — 을 이용해 폭발적인 투쟁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바뀌었다.

노동자 투쟁 물결은 1933년에 시작돼 1934년 미니애폴리스 · 샌프란시스코 시(市) 전체를 뒤흔든 파업을 거쳐 1936~37년 자동차 공장을 중심으로 한 공장 점거파업으로 정점에 달했다. 실업자를 위한 대규모 연방구제제도가 도입되고 미국식 복지제도가 뼈대를 갖추게 된 계기인 ‘뉴딜’은 이런 투쟁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다.

프랑스에서는 1934년 파시스트 조직의 도발에 자극받아 노동자 대중이 급진화한 것이 출발점이었다. 덕분에 1936년 사회당이 주도해 자유주의 부르주아 정당(급진당)과 연합한 인민(민중)전선 정부가 집권했다. 당시 사회당 좌파의 지도자 마르셀 피베르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선언했다. 자신감이 충만한 노동자들은 점거 파업에 들어갔다.

화들짝 놀란 자본가들은 임금 대폭 인상, 유급휴가, 임금 삭감 없는 주 40시간 노동 등의 양보 조치들을 내놓았다. 이것은 대공황기 프랑스 지배계급의 대책인 긴축 정책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었다.

당시 미국과 프랑스 노동자 투쟁에서 주도권은 현장조합원들과 그들 속에서 활동하는 좌파 활동가들 — 공산당이 가장 중요했지만 미국에서는 트로츠키주의자들도 한몫 했다 — 에게 있었다. 기층 동력이 가장 강력했을 때 비로소 양보를 얻을 수 있었다. 행동을 통해 노동자들은 자본가의 사유재산을 존중해야 한다는 관념을 떨쳐버릴 수 있었고 점거 파업을 벌였다.

그러나 이 위대한 투쟁들은 193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 약화했다. 특히, 공산당 지도자들이 스탈린의 인민전선 노선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급진당의 뒤공무니를, 미국에서는 민주당의 뒤공무니를 쫓았다.

그래서 양국 지배자들이 전쟁 준비를 빌미로 양보 조치를 무력화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노동자들은 반동 공세와 전쟁에 맞서 반격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투쟁의 성과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생성과 노동조합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기층 투쟁을 고무하고 기층 노동자와 투쟁의 방향을 함께 토론 · 결정하는 변혁적 정치가 중요했다.

(위) 1936년 7월 말, 투쟁으로 유급 휴가를 획득한 노동자들이 휴가용 자전거를 지급받고 있다.

(아래) 정부는 휴가를 떠나는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열차 승차권을 할인해 줬다.

결국 자본주의는 알려진 사망자만 7천만 명에 이르는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을 통해 대공황을 빠져나왔다. 그러나 당시 투쟁이 헛된 것은 아니었다. 1936년 프랑스 노동자들은 전후 프랑스 노동자 운동의 기준이 된 요구들을 쟁취했다. 뉴딜 때 도입된 복지 정책들의 일부(사회보장법 등)는 지금까지도 미국 노동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늘날 경제 위기는 1930년대 대공황처럼 급속도로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지배자들은 당시와 마찬가지로 책임을 노동자 · 서민에게 떠넘기려 한다. 1930년대 미국 · 프랑스의 투쟁은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경제 위기에 대처할 수 있음을 보여 줬다.

관련 기사

‘민중전선의 계급 타협과 협력’

격주간 <다함께> 74호

‘1936년 플린트 공장점거 파업 70주년’

격주간 <다함께> 79호

※ <저항의 촛불> 웹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추천도서

《알려지지 않은 미국 노동운동 이야기》

리처드 보이어 지음, 책갈피

《[프랑스] 인민전선 비판》

레온 트로츠키 지음, 풀무질

한국사회포럼2008

2008.8.28(목) ~ 30(토)
경희대학교 청운관

맑스 경제학으로 본 오늘의 세계경제 위기

8월 29일(금) 오후 3시 40분 ~ 6시 10분 | 307호

발제 정성진(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토론 이종태(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강남훈(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촛불 이후 정치사회 지형과 진보적 사회운동의 재구성

촛불 기획워크숍

8월 30일(토) 오후 1시 ~ 6시 10분 | B117호

김민영(참여연대), 박진섭(생태지평), 장대현(한국진보연대), 오건호(사

회공공연구소), 이수봉(민주노총), 김혜진(불안정노동철폐), 김태연(노동

전선), 김하영(다함께)

※ 이 외에도 다양한 토론 주제들이 있습니다.



오바마가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조명훈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의 수장을 뽑는 선거인 만큼 미국 안팎에서 관심이 뜨겁다.

특히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버락 오바마는 국내외에서 꽤 인기를 누리고 있다. 지난 7월 독일 베를린에서는 오바마의 연설을 듣기 위해 20만 명이 운집했고, 8월 25일부터 미국 덴버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사람들은 왜 이 47세의 젊은 흑인 정치인에게 주목하는 것일까?

이는 무엇보다 광범한 반(反)부시 정서 덕일 것이다. 지난 2006년 중간선거 참패 이후 사실상 ‘레임덕’에 빠진 부시는 최근에도 지지율 30퍼센트를 넘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는 사람들이 왜 부시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오락가락하고 모호한 언어로 부시의 이라크 전쟁을 비판하며 16개월 안에 이라크에서 철군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는 데서 오는 이미지도 한몫 했다. 인종차별이 뿌리 깊어 아로새겨진 나라에서 이민자 출신의 자수성가한 대통령 후보만큼 ‘아메리칸 드림’을 생생히 보여 주는 사례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오바마를 지지하는 사람 중에는 여성·빈민·청년·흑인·이주민 등 오랫동안 주류 정치에서 소외돼 온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과연 오바마가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반전 후보?

그는 민주당 경선 과정 내내 자신은 힐러리 클린턴과 달리 이라크 전쟁을 처음부터 반대했다며 진정한 ‘반전 후보’임을 자임했다. 그러나 그는 이라크 전쟁을 일관되게 반대하지는 않았다.

2004년 상원의원으로 당선한 뒤 오바마는 이라크 전비를 조건 없이 승인해 달라는 부시의 요청을 2005년과 2006년 연거푸 지지했고, 미국 내 반전 운동을 탄압하는 데 이용돼 온 ‘애국자법’의 연장에도 찬성했다.

16개월 안에 이라크 주둔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주장도 내용을 뜯어보면 사람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 정확히 말해 그는 이라크 주둔 미군 가운데 “전투 여단”만을 철군하겠다는 것이다. “전투 여단”을 제외한 약 6만~8만 명의 미군은 16개월 뒤에도 이라크에 남아 “알카에다 잔당들을 소탕하고, 이라크 주재 미국인들을 보호하고, 이라크 군인들을 훈련시킬 것이다.”

“전투 여단”이 떠난 자리는 ‘블랙워터’ 같은 사설경호업체 — 2007년 9월 바그다드 시내에서 총기를 난사해 무고한 이라크인 17명을 숨지게 했다 — 들이 메울 예정이다. 그나마 16개월 내 “전투 여단” 철수 약속조차 “이라크 현지 군 사령관들과의 대화를 통해 … 좀더 세련되게 수정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라크에서 철수한 “전투 여단”은 어디로 가는가? 오바마는 말한다. “우리는 더 광범한 전략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심지어 그는 파키스탄 영토에서 군사 행동까지 추진할 태세다. “파키스탄에 은신해 있는 테러조직이 미국을 공격할 것이라는 정보만 있다면, 파키스탄 정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군을 투입할 수 있다.”

오바마의 이 주장은 이런저런 압력에 밀려 2011년까지 이라크에서 철군을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주변 동맹들에게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구걸하고 다니는 부시와 비교해 봐도 딱히 더 낫다고 하기 힘들다.

이란 핵에 대한 오바마의 견해를 살펴봐도 부시와 별 차이가 없긴 마찬가지다. “이란의 공격으로부터 미국과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군사적 해결 방안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테러와의 전쟁

오바마는 전쟁을 끝내겠다는 게 아니다. 자신이 부시나 매케인보다 더 성공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의 한 보수적인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11월에 누가 승리하든, 미국의 현재 대외정책은 다음 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오바마와 매케인은 모두 부시가 전술적으로 미숙했다고 지적할 뿐 ‘테러와의 전쟁’ 자체를 거스를 생각은 없다.”

그래서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한때 매케인보다 10퍼센트 넘게 앞서던 오바마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핵심적으로는 민주당 경선 이후 미국 지배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오바마의 ‘우경화’ 행보 때문인 듯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오바마는 자신에 대한 미국 주류 사회의 보수적 비판을 무마한 답시고 더 ‘우경화’하는 길을 택했다. 자신의 러닝메이트이자 부통령 후보로 상원

의원 조지프 바이든을 낙점한 것이다.

바이든은 공화당 대선 후보 매케인도 “좋은 친구”라며 환영할 정도로 민주당에서 가장 호전적인 인물 중 하나다. 그는 1999년 상원에서 매케인과 주도해 이른바 ‘코소보 결의안’을 통과시켜 클린턴 정부의 군사적 개입을 도왔고, 2002년에는 부시의 이라크 침공 계획을 적극 지지했다. 2005년에는 “나와 매케인은 지난 2년 동안 증파를 요구해 왔다”며 이라크 수령에 빠진 부시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었다.

따라서 진정 전쟁을 끝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바마와 민주당에게 기대해선 안 된다.

미국 주류 정치의 양대 축 중 하나인 민주당은 공화당과 마찬가지로 그 기반이 대자본가들에게 집중돼 있다. 그래서 이 정당의 엘리트들은 미국의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미국 기업의 이익을 지키는 데, 나아가 미국 제국주의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둔다.

민주당이 부시의 “테러와의 전쟁”에 다소 비판적인 듯한 입장을 취하게 만든 힘은 아래로부터 반전 운동에서 나왔다.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계속되는 제국주의 점령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또 이란으로 확대될지 모를 “테러와의 전쟁”을 끝장내기 위해 우리는 앞으로도 강력한 반전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오바마의 대(對)한반도 구상은 기대할 만할까?

한국에서도 오바마의 인기는 높은 편이다. 지난 6월 중동 위성방송 알자지라가 전 세계 22개국 2만 2천6백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국 대선 후보 인지도·선호도 조사를 보면, 오바마에 대한 한국인의 선호도는 67퍼센트나 됐다.(조사 대상 국가 22개국 중 3위, 반면 매케인에 대한 선호도는 16퍼센트)

국내 개혁적 언론들의 기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오바마의 변화 약속에 주목한다”(〈한겨레〉), “부시 행정부와

차별화된 오바마의 진보적 공약은 설득력을 발휘한다”(〈경향신문〉). 성공회대 김민웅 교수도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한반도 평화 문제는 상당히 낙관적”이라는 전망을 내놔다.

기대

그러나 오바마가 부시와 달리 한반도 평화 문제에 진지할 것이란 기대는 실망으로 끝날 가망성이 커 보인다. 얼마 전 오바마는 “북한에 대해 어

떠한 환상도 갖고 있지 않다”며 “[북한에] 단호해야 할 뿐 아니라 양보해서도 안 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북한 핵에 대해 “군사적 방안을 테이블에서 치우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사실,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핵심은 잠재적 경쟁국인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악마화하는 데는 동아시아 지역에 자국 군대를 주둔시켜 중국을 견제하려는 속셈이 있다. 실제, 민주당 클린턴 정부는 북한 핵 시설에 대한 폭격 일보직전까지 간 바

가 있다.

오바마가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한미동맹은 …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 안보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오바마가 한미동맹뿐 아니라 “일본, 호주, 인도와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중국을 고립시킬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처럼 오바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전통적인 미국 지배자들의 전략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이라크

미국은 여전히 영구 주둔을 꿈꾼다

사이먼 아사프 (소셜리스트워커 기자)

미국 정부가 반발에 직면해, 주둔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원래 입장에서 후퇴했다.

그러나 비록 미국이 협정문 — 이른바 주둔군지위협정 — 을 일부 양보했지만 이것이 점령 종식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정부는 원래 협정문 초안에 군사기지 4백여 개를 건설하고 이라크 영토를 “제3국”을 공격하기 위한 근거지로 삼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것은 이라크의 이웃 국가인 이란에 대한 위협이자 공격의 사전포석으로 여겨졌다.

미군과 “외국인 하청업자”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조항이나 점령군은 조건에 상관 없이 살상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도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평소에는 고분고분하던 이라크 정부조차 철군 일정을 명확히 하라고 미국에 요구했던 것이다.

이라크 정부의 제안을 보면, 미군 병사들은 내년부터 이라크 도시와 마을에서 물러나야 하며 2011년 말에는 모든 전투병력이 이라크에서 떠나야 한다.(물론 영구 주둔 기지는 해당되지 않는다.)

점령의 위기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협정문 초안은 원래의 계획에 비해 큰 후퇴다. 미국 정부는 이라크인들의 저항 앞에 한발 물러났고, 먼저 시아파 지도자들과, 나중에는 수니파 저항세력들과, 마지막으로 무크타다 알사드르와 계속 타협해야 했다. 이것은 미군 점령의 위기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

미국은 연이은 후퇴를 이라크 정부와 비밀 조약을 맺는 것으로 만회하려 했다. 그러나 한 아랍 신문이 이 비밀 조약의 존재를 폭로했고, 대중의 분노가 폭발했다.

많은 이라크인들이 거리로 나섰다, 이라크 총리 누리 알말리키의 동맹 세력들은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위협했다.

8월 초 미국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가 협정의 서명을 받으려 바그다드를 방문했을 때 시아파 성직인 나자프 — 아야톨라 알리 시스타니의 근거지 — 에서는 수만 명이 항의 시위를 벌였다. 라이스는 빈손으로 떠나야 했다.

말리키는 면책특권을 포기하고 철군 일정을 정하지 않으면 협정문에 서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철군이 “현장 상황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철군 약속을 어길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도 세부 내용은 비밀에 싸여 있지만, 미국 정부는 영구 군사기지 건설과 이라크·이란 접경 지역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이라크 저항 세력과 대치중인 미군 - “철군은 현장 상황에 달려 있다”

파키스탄

갈수록 심각해지는 불안정

8월 18일 부시가 아끼는 독재자인 파키스탄 대통령 페르베즈 무사라프가 의회에서 탄핵될 위기에 처하자 스스로 사퇴했다. 그의 사임은 부시의 “테러와의 전쟁”에 일대 타격이다.

1999년 쿠데타로 집권한 무사라프는 9·11 이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지지하면서 총애를 받았다. 그래서 부시는 퇴임하는 무사라프에게 “테러와의 전쟁”에서 헌신적인 파트너”였다고 칭송했다.

그러나 무사라프는 파키스탄의 가난한 대중에게는 재앙이었다. 그는 파키스탄의 아프가니스탄 접경지에서 반(反)점령 저항세력과 끔찍한 전투를 몇 차례씩 치렀다. 부시의 요청으로 수행된 이 전쟁으로 파키스탄인 수십만 명이 난민이 됐다.

그러나 무사라프가 인기를 잃은 것은 단

지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지지 때문만은 아니다. 그는 권력을 잡은 뒤로 일련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철강과 전력 산업이 험값에 다국적기업들에 팔렸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이 부자들에게 흘러들어 갔다. 반면 빈곤층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졌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지만 임금은 제자리걸음이었다.

정권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자 무사라프는 법무부 내 반대파를 제거하는 일에 착수했다. 2007년 11월 그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법원장 이프티카르 초드리를 해임했다.

이에 분노한 변호사·언론인·시민단체 활동가·학생 등이 대법원장 복직을 요구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 운동은

비록 곧바로 무사라프를 퇴임시키지는 못했지만 무사라프가 국내에서 전혀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렸다.

무사라프의 정당은 올해 2월에 치른 선거에서 참패했다. 새롭게 당선된 연립정부는 무사라프를 권좌에서 몰아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슬람 저항세력

한편, 새 정부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파키스탄 대중은 새 정부가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지원을 중단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파키스탄의 새 정부에게 아프가니스탄 국경을 넘어 파키스탄 지역까지 미군을 보낼 수 있게 해 달라고 거듭 거듭 요청하고 있다. 특히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과 나토군 사상자가 늘어나자 새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접경 지역의 저항 세력을 단속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미국 국방부 장관 콘돌리자 라이스는 최근 언론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파키스탄 새 정부가 이슬람 저항세력을 몰아내는 데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파키스탄 대중은 새 정부에서도 전쟁이 계속되는 것을 보며 실망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곧 수십억 달러의 원조를 잃게 된다는 것을 뜻하므로 파키스탄의 어느 정치인도 문제의 핵심이 전쟁 자체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가하는 압력이 커질수록 저항세력과 갈등은 더 심각해질 것이고, 파키스탄에서 더 많은 지역이 끔찍한 전쟁의 포화에 시달리게 될 듯하다.



독재자 무사라프 사임 소식에 기뻐하는 파키스탄인들



지난 4월 임금 인상과 국유화를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SIDOR 철강 노동자들

베네수엘라

‘볼리바르식 혁명’의 판돈이 커지다

최근 베네수엘라를 방문한 영국인 사회주의자 스티브 헨샬(Steve Henshall)이 베네수엘라의 급진 대통령 우고 차베스와 ‘볼리바르식 혁명’의 방향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을 소개한다.

베네수엘라의 삶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치열한 정치적 논쟁이다. 일요일 오전 광장에는 시사쟁점과 베네수엘라 사회의 미래에 대해 토론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다.

그러나 빈부격차는 여전히 크다. 많은 집이 수도·전기 같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소수 특권층은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주거단지와 에어컨이 가동되는 쇼핑몰을 왔다갔다하며 산다. 반면 대다수 베네수엘라인들은 저임금과 고물가로 고생한다.

소수 특권층은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주거단지와 에어컨이 가동되는 쇼핑몰을 왔다갔다하며 산다. 반면 대다수 베네수엘라인들은 저임금과 고물가로 고생한다.

소수 특권층은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주거단지와 에어컨이 가동되는 쇼핑몰을 왔다갔다하며 산다. 반면 대다수 베네수엘라인들은 저임금과 고물가로 고생한다.

차베스는 여전히 대중의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대중이 차베스의 모든 행동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불만은 정부 일반이나 외국 자본에 반발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미시오네스

차베스는 지난 10년 동안 빈민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진보적 조치들을 많이 도입했다. 특히 ‘미시오네스’[사회사업]는 사회개혁을 위해 투쟁하는 대중적 민족주의 운동인 ‘볼리바르식 혁명’의 핵심 사업으로, 성인 문맹 퇴치 사업, 의료보장 확대 등이 거기에 포함된다.

또, 차베스 정부 하에서 좌파가 활동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 차베스 정부는 전일 정부와는 확실히 다르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처럼 석유자원이 풍부한 나라에서 빈민의 삶은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

차베스 정부는 식료품 가격 인상 제한 등 생계비 통제 조치를 도입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식량 생산을 직접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본가들은 높은 가격에 식량을 해외로 수출하는 등 베네수엘라 식량 부족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그런데 차베스 정부는 최근 식료품 가격 통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고, ‘볼리바르식 혁명’의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차베스는 기업가·은행가 수백 명과 만나 “국민적 단결”을 호소했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발표했다.

빈민가에 살고 있는 한 활동가는 “[정부는] 과거에는 그들이 우리의 적이라고 말했는데, 이제 친구가 되라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차베스가 ‘민중 자본가’와의 단결을 호소하는 것은 민중 권력을 찬양한 그 자신의 말과 모순된다.

우파는 분열해 있으므로 아직까지는 차베스를 끌어내리고 시계바늘을 과거로 돌릴 충분한 힘이 없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에는 매우 다양한 좌파 단체들이 기층에 존재한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표적 사례다. 이곳에서 주민들은 지역 편의시설 개선 같은 사소한 일부터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 같은 포괄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들을 집단적으로 논의한다.

또한, 차베스의 베네수엘라 통합사회주의당(PSUV) 안팎에 독립적이고 투쟁적인 좌파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존재한다.

PSUV는 당원 6백만 명을 보유한 거대 정당이다. 어떤 사람은 PSUV가 비민주적일 뿐 아니라 정부가 권력을 유지하고 기층운동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라고 비판한다.

[PSUV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국노동자연합(UNT)의 다양한 조직들이 서로 단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UNT는 올해 말 전국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최근 베네수엘라의 대표적 철강 기업인 시도르에서 매우 중요한 파업이 일어났다. 노동자들이 약 3개월간 투쟁을 벌인 끝에 시도르는 공기업화됐다.

공장 점거

시도르의 노동자들은 공장을 소유한 합작기업 테인트가 임금인상을 거부하자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공장을 점거했고, 당시 노동부 장관 호세 라몬 리베로는 노동자 몰래 기업주와 타협하려 했다.

공장을 점거한 노동자들은 식료품 배달이 중단되고 나중에는 주방위군과 구사대가 투입됐을 때도 굳건히 싸웠다.

다른 공장 노동자들이 신속히 연대 활동을 조직하자 차베스가 개입해야 했다. 그는 노동부 장관을 경질하고 시도르의 국유화를 약속했다.

볼리바르식 혁명의 미래에 대한 논쟁에서 어떤 사람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이 기층운동의 발전을 지지하며, 정부가 노동조합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기층조직들을 더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내가 대화한 사람들은 생필품 가격 상승, 식료품 부족, 부패 등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다가오는 11월 지방선거는 차베스와 그 정부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북한 핵불능화 조치 중단

미국에 책임이 있다

한규한

‘의지’ 사이의 괴리가 그것이다.

북한이 모든 검증 체계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사실상 “특별사찰”을 요구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 특별사찰 문제로 1994년 한반도는 전쟁 위기 직전까지 간 적도 있다.

북한이 “이라크에서처럼 제 마음대로 가택수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라고 경고한 것처럼, 특별사찰은 제국주의적 횡포라는 성격이 강하다. 이라크 전쟁 직전 후세인도 이런 종류의 특별사찰을 받아들여 대통령궁까지 사찰당했다. 그러나 미국은 특별사찰로 대량살상무기의 증거를 찾지 못했는데도, 이에 아랑곳 않고 이라크를 침공했고 후세인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패권의 약화

설사, 북한이 특별사찰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해 북한을 압박하고, 테러지원국 해제와 같은 기존 합의를 파기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다.

이런 면에 북한은 미국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핵시설 복구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는데 사태가 장기 교착하면 국제원자력기구와 미국 감시단을 추방하는 카드도 고려할 개연성이 있다.

반면, 북한은 대체로 합의 사항을 이행해 왔다. 불능화 대상 11개 항목 중 8개를 이행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의 상응 조치인 대북 중유 지원은 약속된 1백만 톤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북핵 문제 해결 2단계 과제의 불능화와 신고)의 밑그림을 그린 10·3 합의에 따르면 북한의 핵 신고에 상응하는 미국 쪽의 조치가 테러지원국 해제임은 명백하다. 북한의 주장대로 ‘검증’ 문제는 당시 합의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북핵 문제 해결 2단계 과제의 불능화와 신고)의 밑그림을 그린 10·3 합의에 따르면 북한의 핵 신고에 상응하는 미국 쪽의 조치가 테러지원국 해제임은 명백하다. 북한의 주장대로 ‘검증’ 문제는 당시 합의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북한의 핵불능화 조치 중단에 당장 미국이 강경책을 쓸 여유는 별로 없어 보인다. 북한은 “우리는 미국에 ‘고분거리지 않는 나라 명단’에 그냥 남아 있어도 무방하다”고 호기를 부리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 패권의 약화가 자동으로 한반도 평화를 뜻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은 자신의 힘의 약화를 핵심 동맹국가들(특히 남한과 일본)의 군사 능력 강화로 메우려 할 것이고, 이는 중장기적으로는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일 것이다.

결국 한반도 평화 진전은 제국주의와 전쟁에 맞선 반전 운동의 진전에 달려 있을 것이다.

제국주의의 불안정한 세계 질서

[편집자 주] 카프카스에서 일어난 7일간의 유혈 난자한 전쟁이 끝난 뒤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존 리즈가 냉전 후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전쟁이 빈번히 일어나는 이유를 살펴본다. 존 리즈는 영국 전쟁저지연합의 사무국장이다.

시대를 불문하고 자본주의를 유별나게 폭력적인 체제로 만드는 근본적 특징이 하나 있다. 그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하층은 또는 우연한 일부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매우 핵심적인 일부다. 그것은 바로 경쟁이다.

칼 맑스부터 마거릿 대처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경제적 경쟁이 자본주의의 핵심이라는 데 동의한다. '자유' 시장이 뜻하는 바는 동네 구멍가게에서 거대 다국적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시장에서 서로 경쟁한다는 것이다. 기업은 고객을 더 많이 확보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서로 경쟁한다. 또, 값싼 노동력과 값싼 원료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한다. 경쟁에서 승리한 기업은 번창하고 패배한 기업은 경쟁업체에 밀려 업계에서 퇴출된다. 적어도 원리상으로는 그렇다.

현실은 상당히 다르다. 흔히 독점 기업과 카르텔이 시장 경쟁을 크게 제약한다.

국가가 흔히 경쟁의 규칙을 바꾸고, 이런저런 정치적 이유로 파산을 방지할 수 없는 기업들을 구제하거나 후원한다. 노년록[지난해 9월 파산 위기에 몰렸던 영국 제5위의 모기지 은행]을 사실상 국유화한 사례를 보라.

국가는 국내의 노동운동과 해외의 경제적 경쟁자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기 위한 경찰과 군대의 힘을 사용해서 경쟁의 규칙을 강제로 바꾼다.

그러면 마찰이 일어난다. 기업 간의 경제적 경쟁은 항상 국민국가 간의 경제적·정치적·군사적 경쟁을 부른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는 국가의 무식 주먹이 필요하다.

17세기 이래로 자본주의 체제에서 전쟁은 더 체계적이고 파괴적인 과정이 됐다. 공업의 발전으로 국민국가는 전보다 훨씬 더 유혈

난자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무기를 확보했다. 그리고 경쟁 때문에 국민국가는 전보다 더 체계적으로 전쟁을 벌일 수 있게 됐다.

17세기에 네덜란드와 영국에서 혁명으로 최초의 자본주의 국가들이 출현하자마자 그 국가들은 서로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국가의 후원을 받은 기업들—네덜란드 동인도회사와 영국 동인도회사—은 근대적 식민 사업을 시작했다.

그때 출현한 최초의 —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조그마한 — 육군·해군·다국적기업 들이 만들어 놓은 패턴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가장 강력한 산업 강국들은 자신의 경제적 부를 이용해서 군사력을 증강해, 경쟁자들을 협박하거나 꺾고 그래서 경쟁자들을 지배할 능력을 강화하려 한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주요 열강들이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은 없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들을 지배하거나 '제국의 결단'을 과시하는 행동을 감행한다는 것이다.

이 식민 지배와 제국주의 과정

은 언제나 저항 — 1650년대에 올리버 크롬웰의 아일랜드 '평정'에 맞서 싸운 사람들부터 20세기의 위대한 식민지 해방 운동을 거쳐 오늘날의 이라크 저항세력에 이르기까지 — 을 불러일으켰다.

현대 자본주의

자본주의 체제는 초기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성장했다.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의 각 국면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는 양상은 조금씩 달랐고 주요 국가들 사이의 경쟁 패턴도 달랐다.

주요 열강들이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식민지를 통치하는 직접적인 식민지 지배 체제는 19세기에 가장 급속하게 확산됐다.

식민지 지배 체제는 1914년에 거대 열강들을 세계대전으로 몰아넣었다. 이 전 세계적인 대참사는 1917년 러시아 혁명과 1918년 독일 혁명 뒤에야 끝이 났다.

[제1차세계대전 후의] 불안한 평화는 1939년에 다시 산산조각났다. 끝나지 않은 유럽 열강들 간의 경쟁이 인류에게 제2차세계대전

을 가져다준 것이다.

러시아 혁명이 니콜라이 부하린은 당시의 체제를 정확하게 요약했다. "세계 자본주의의 무계획적 구조는 두 가지 사실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한편으로는 세계경제 위기,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이다. ... 자본주의 사회의 전쟁은 자본주의 경쟁의 한 방법일 뿐이다. 즉, 자본주의 경쟁이 세계경제 영역으로까지 확장될 때 전쟁이 일어난다."

냉전

제2차세계대전 후에 완전히 새로운 제국주의 체제가 등장했다. 영국·프랑스 같은 승전국이든 독일·스페인·이탈리아 같은 패전국이든 유럽의 옛 식민주의 열강들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다.

그들을 대신한 것은 소련과 미국이었다. 소련은 나치를 물리쳤을 뿐 아니라 군사력을 이용해 자신의 제국을 유럽 중심부까지 확장시켰고, 미국은 단연 세계 최강의 경제·군사 대국으로 떠올랐다.

이 양극화된 세계, 냉전의 세계는 1945년부터 동구권이 붕괴한 1989년까지 지속됐다.

이 시기에 발전한 두 가지 현상이 냉전 종식 후 오늘날의 제국주의 단계를 결정했다.

첫째, 소련과 동유럽의 국가자본주의 체제들(서방에서 사적 자본가들과 국가가 하는 구실을 소련과 동유럽에서는 국가가 도맡아 했다)은 비록 냉전 초기에는 서방의 경제 성장을 앞질렀지만 1950년대와 60년대의 장기 호황기에 확장된 세계 시장에서 배제된 탓에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마침내 냉전의 경제적·군사적 대결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둘째, 승리의 비용을 미국이 거의 혼자서 부담했다.

미국의 군비 지출이 서방의 시

장을 지령하고 1930년대식 공황의 재발을 막는 동안, 군비 지출 규모가 미국보다 작았던 다른 서방 국가들, 특히 독일과 일본의 국내 경제가 세계 시장의 성장 혜택을 누렸다.

미국은 냉전에서 맞서 싸운 적에게는 승리했지만 냉전에서 자신의 우군이었던 동맹국들에게 패배한 것이다.

새로운 제국주의

냉전 종식 후의 세계에서도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군사 강국이다. 사실, 지금 미국의 군비 지출 규모는 미국 이하 군비 지출 상위 10개국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경제임에도 제2차세계대전 직후의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

예컨대 당시 미국의 제조업 생산이 세계 제조업 생산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했다. 이제 그 수치는 20퍼센트 안팎이다.

따라서 미국은 압도적으로 우월한 군사력을 사용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제력을 만회하려는 경향이 있다. 당근보다는 채찍을 사용할 생각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인 것이다.

이것이 조지 부시가 주창한 선제 공격 독트린의 속뜻이고, 1989년 이후 잇따르고 있는 전쟁의 근본적 원인이다. 그런 전쟁에서 미국은 경쟁국들을 위협하고 동맹국들을 굴복시켜, 세계에서 미국의 경제적

이해관계, 특히 석유 지배권을 지키려 해 왔다.

물론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이 외교 정책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짧은 기간에 많은 적들을 만들어 내고 많은 동맹국들을 만든, 다국화된 세계에서 살고 있다.

냉전 종식 후 지금까지 벌어진 전쟁은 모두 주요 열강과 약소국 사이의 전쟁이었다. 세계 체제에서 미국이 상어라면 이라크·세르비아·아프가니스탄은 피라미일 뿐이다.

그럼에도 이런 전쟁들에서 승리하기는 쉽지 않았고 미국과 옛 동맹국들은 분열했다.

이런 분열의 가장 두드러진 사례는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프랑스·독일 — 도널드 럼스펠드가 "낡은 유럽"이라고 부른 — 과 미국·영국의 분열이었다. 프랑스와 독일은 미국의 우월한 군사력이 아니라 경제력에 의존해서 세계 체제의 구조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기를 원하는 유럽 열강들을 대변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경제임에도 제2차세계대전 직후의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

따라서 미국은 압도적으로 우월한 군사력을 사용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제력을 만회하려는 경향이 있다. 당근보다는 채찍을 사용할 생각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인 것이다.

이것이 조지 부시가 주창한 선제 공격 독트린의 속뜻이고, 1989년 이후 잇따르고 있는 전쟁의 근본적 원인이다. 그런 전쟁에서 미국은 경쟁국들을 위협하고 동맹국들을 굴복시켜, 세계에서 미국의 경제적

국·슬로바키아공화국뿐 아니라 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라트비아의 발트해 연안 국가들도 나토에 가입시킴으로써 옛 소련 영토의 상당 부분까지 잠식했다.

게다가 옛 소련 소속이었던 중앙아시아 공화국들 — 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탄·투르크메니스탄 — 에도 미군 기지들이 들어섰다.

이런 이유만으로도, 러시아가 "가까운 외국"[옛 소련의 일부였던 여러 독립 공화국의 총칭]이라고 부른 곳 어디서든지 나토의 대리인들 가운데 어느 하나와 러시아가 충돌할 가능성이 상존했다.

나토의 이런 확장은 그루지야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서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프랑스와 독일의 반대로 두 나라의 나토 가입은 지연되고 있었다.

어쨌든, 그루지야는 이미 미국의 해외 원조를 받고 있었고,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이

좀더 깊은 분석을 위하여 이 책을 참고하십시오



존 리즈 지음, 장일출(2008) | 값 1만 1천 원

라크에 파병하고 있었다.

미국이 원했던 대로 그루지야가 나토에 가입한 상태였다면, 러시아가 그루지야의 남(南)오세티야 침공에 반격했을 때 서방의 동맹국들은 모두 나토 조약에 따라 군대를 파병해야 했을 것이다.

러시아가 더는 초강대국이 아닐 지라도 지역 열강인 것은 사실이다. 러시아 경제는 1990년대의 심각한 불황에서 회복되고 있다. 주로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 덕분인데, 유럽이 바로 이 자원들을 수입하고 있다.

러시아는 여전히 핵 강대국이고, 상당한 재래식 군사력으로 보유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중국·이란에 이르기까지 세계 도처에서 그루지야 전쟁의 여파를 예의 주시할 것이다.

[제국주의] 세계 체제에서 국가들은 알 카포네 시대의 시카고 갱들과 비슷하다. 그들은 [상대의] 약점에서 기회를 본다. 그루지야 전쟁으로 고무된 러시아는 다른 "가까운 외국"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 할 것이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러시아의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것은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세계의 알 카포네에 맞설 수 있다는 희망을 갖도록 부추길 것이다. 냉전 종식과 함께 시작된 새로운 제국주의는 이제 더 위험해졌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러시아·그루지야 전쟁의 진정한 패배자는 부시다

이제야 러시아와 그루지야 간 전쟁이 진정되는 듯하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러시아는 그루지야 대통령 미하일 사카슈빌리가 부시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기간 군사 시설을 체계적으로 파괴한 후, 여전히 그루지야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으로 군대를 이동시켰다.

그러나 카프카스 지역에서 사카슈빌리가 패배자라면, 전 세계적 수준에서는 미국이 패배자다. 단기적으로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그렇다.

일간지의 머리기사를 넘기고 전문가 논평란을 보면, 부시 정부는 전임 클린턴 정부로부터 계승한 정책 때문에 집중포화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클린턴과 부시는 냉전 이후 러시아가 최악한 틈을 타 나

토 가입국을 러시아의 국경 지역으로 확장하는 정책을 펴 왔다. 러시아의 위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럽연합의 경우 러시아 예

외에 대한 <뉴욕타임스>의 심층보도는 전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인 제임스 폴린스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러시아가 '우리에게는 방어할 이해관계가 있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지닌지 말인 지 이해하지 못했다."

부시 정부는 이런 오만함에 더해 무모하기도 했다. 고위 정보 분석가였던 한 인사는 <뉴욕타임스>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사카슈빌리의 군대를 훈련시켰고 그는 군사적 모험에 동원할 수 있는 고도로 훈련된 소수 정예 부대를 보유하게 됐다. [그러나] 정보 기관은 이것이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느꼈다." 부통령 딕 체니는 한술 더 떠 스윙거 지대공 미사일을 그루지야에 판매하려 했다.

그러나 그루지야 위기는 부시 일당의 무능함 이상을 드러냈다. 미국 입장에서 더 곤혹스러운 것은, 이 사건이 미국이 가진 힘의 한계를 극명히 보여 준 것이다. 문제는 단지 미군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발이 묶여 있어 카프카스에 개입할 수 없었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실사 미국이 군사적 여유가 좀 더 있었다 하더라도 카프카스 파병은 러시아와 전면전으로 발전할 수 있다. 부시와 체니도 세계의 중 말을 가져올 핵전쟁을 각오할 정도로 명칭하지는 않다.

미국 정부의 약점은 러시아를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의 문제를 두고 더 뚜렷하게 드러났다. 지난주(8월 19일) 나토 외무장관들은 러시아를 성토하고 그루지야를 지지했지만 어떤 구체적 행동을 결의하지는 않았다.

않았다. 나토 주재 러시아 대사는 "용두사미"라고 비교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를 상대로 사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조치들 — G8에서 축출, WTO 가입 보류 등 — 은 기껏해야 상징적 의미가 있을 뿐이다. 또, 그런 조치들은 이 기구들이 진정한 국제기구가 아니라 서방 지배를 위한 도구라는 인상을 중국과 인도 같은 신흥 강국들에게 심어 주는 역효과도 있을 것이다.

더구나, 미국 정부에게는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하다. 모스크바 소재 카네기센터의 마샤 리프먼은 옛 소련 핵무기들에 대한 통제 문제, 아프가니스탄 전쟁 지원 문제, 이란·북한의 핵프로그램 중단 문제 등을 예로 들면서 러시아가 미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미국이 러시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더 많으므로 "러시아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럽연합의 경우 러시아 예외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러시아는 경제 전선에서 취약한 면이 있다. 러시아 주가는 지난 두 달 동안 25퍼센트 하락했다. 그루지야와 전쟁이 발발한 주에는 러시아 외환보유액이 1백60억 달러나 줄었다.

그러나 이런 자본 탈출을 적절히 맥락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으면서 러시아는 여전히 5천8백10억 달러의 외환 — 세계 3위 — 을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의 자신감과 능력은 이런 에너지 호황에 힘입었다. 러시아 정부는 앞으로도 강한 면모를 보여줄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또 다른 뇌관일지 가능성이 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빅토르 유시첸코는 사카슈빌리처럼 나토 가입을 원한다.

우크라이나는 비슷한 영향력을 가진 친서방계와 친러시아계 정치 세력으로 분열해 있다. 또,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통치하는데, 이곳은 러시아 흑해함대의 기지이기도 하다. 러시아·그루지야 전쟁 동안, 유시첸코는 그루지야 공격에 동원된 러시아 전함들이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 기지로 돌아오는 것을 가로막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다른 위협들처럼, 이것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당분간은 러시아가 칼자루를 쥐고 있을 것 같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교수이고,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이다. 국내 번역된 주저서로는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 (책갈피)과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 (책갈피) 등이 있다.

맑스주의와 언어 (II)

이기웅

경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지난 호에 이어 **이기웅** 교수의 ‘맑스주의와 언어’ 후속편을 싣는다. 이기웅 교수는 경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로 러시아어 언어철학을 전공했다. 필자는 최근 ‘다함께’가 주최한 맑시즘2008에서 같은 주제로 연설한 바 있다.

지난 호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데올로기와 언어의 밀접한 연관성을 시종일관 강조하면서 언어 현상을 발화(發話) 차원에서 고찰할 필요성을 규명하고 있는 《맑스주의와 언어철학》(국역: 《언어와 이데올로기》, 푸른사상 2권)에서, 볼로쉬노프가 보여 주는 이론적 신중함과 미덕은 가령 기계적 유물론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마르의 언어 이론과 비교해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그러면 먼저 마르의 학설 중에서 우리의 논의와 관계되는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언어는 예술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상부구조에 속한다. 따라서 언어의 발전 단계는 사회의 발전 단계에 대응된다. 그리고 계급적이지 않은 사고가 없는 것처럼 계급적이지 않은 언어도 없다. 심지어 동일한 민족의 경우에도 상이한 계급들을 초월하는 민족 공통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상이한 계급적 언어들 및 이들 사이의 교차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만일 거기에 어떤 공통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러한 교차의 반영으로서 궁극적으로 계급적 성격을 갖는다.

2) 그리고 동일한 사회구조를 갖는 나라들의 동일한 계급의 언어들은 동일 민족 내의 상이한 계급들의 언어들보다도 유형적으로 더 큰 유사성을 갖는다. 따라서 모든 상이한 언어들은 장차 인류가 공산주의 사회로 발전해 감에 따라 하나의 단일한 유형의 언어로 귀결될 것이다.

위의 내용에서, 터무니없이 사변적인 **2)**에 비해서 **1)**은 언뜻 보면 다소 그럴듯도 해 보인다.(그런데 스탈린은 당시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필요한 것이 **2)**의 부분이었는지, 1930년 제16차 전소연방 공산당 대회의 연설에서 그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인용한다.)

그러나 주장 **1)**의 이론적 근거이자 치명적 오류는 언어를 곧바로 하부구조에 대응되는 상부구조의 현상으로, 그리고 계급적 현상으로 단순화시킨 데 있다. 그러나 ‘인간에게서 의식의 발생만큼이나 오래된 언어는 나와 타자 사이에 소통의 끊임없는 필요와 욕구로부터 발생한 것’인 이상, 일차적으로는 사회의 상부구조와 하부구조 모두에 속하는 것이다. 요컨대, 사회의 가장 일반적인 소통 수단인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언어의 변화는 직접적으로 사회의 발전 단계에 대응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자체의 내부적 요인들과 그것을 둘러싼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



동일한 언어 기호, 상이한 이데올로기적 목소리들
- 지난 6월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대해 논쟁한 ‘고대녀’ 김지윤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들(가령, 민족의 이동이나 분열, 다른 민족의 침입이나 지배, 다른 언어들과의 접촉, 사회적 변동이나 발전 등과 같은 것들)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다. 뿐만 아니라, 한 언어 안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 차별화 현상들도 단순히 계급적 차별화와 대응되는 것은 아니다. 언어적 차별화에는 계급적인 것뿐만 아니라, 집단적, 지역적, 정치적, 문화적, 성적, 인종적인 것들도 반영되고 있다.

일반적 소통 수단으로서의 언어

볼로쉬노프의 저작이 갖는 이론적 장점 중의 하나는 이러한 언어적 사실들을 결코 왜곡하거나 단순화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그는 언어를 가장 뛰어난 이데올로기적 현상이라고 규정할 때, 언어 자체가 모든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중립적이라는 사실 또한 이야기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신중한 태도가 의미하는 바는 언어가 이데올로기적 현상으로서 상부구조에 속하지만, 중립적인 것으로서는 사회 전체에 속한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리고 그는 또한 언어의 경계가 계급의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명확히 한다. 실제로 동일한 언어 공동체 내에서 상이한 계급들은 동일한 기호 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언어의 중립적인 그리고 공동체적인 성격에 대한 볼로쉬노프의 이러한 사실적 지적들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마르주의에 대한 후견인 구실에 싫증을 내고 이제 스스로 언어학자를 자처하게 되는 1950년의 스탈린의 태도와 과연 무엇이 다른 것일까?

1934년 마르가 사망한 후에도 추종자들에게 의해서 여전히 그의 학설이 위세를 떨치던 시기에, 갑작스럽게 1950년 5월 9일부터 7월 4일 사이에 <프라브다> 지에서는 마르의 학설을 놓고 학자들 사이에 공개적인 토론이 진행된다(배후에서 논의를 촉발시킨 것은 아마도 스탈린 자신인 것 같다). 스탈린은 <언어학에서의 맑스주의에 관해서>라는 논설을 통해 이 토론에 직접 개입하면서 마르의 학설을 비판한다. 이것을 두 부분으로 요약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언어는 상부구조가 아니며, 계급성을 특징으로 하지 않는다. 언어는 동일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사회적 활동의 전 영역에 걸쳐서 공통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가령 혁명 이전의 러시아어와 혁명 이후의 러시아어를 비교해 보면 자명하다.

2) 그리고 언어의 역사적 변화는 점진적인 것이어서, 언어들 사이의 “교차”는 마르의 주장처럼 새로운 언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언어의 승리로 끝난다. 항상 러시아어가 그랬듯이 말이다. 끝으로 마르의 언어학의 상황을 폭압적인 체제로 만들었으며, 맑스주의와는 상관없는 저급한 내용들을 가지고 혁명 이전의 러시아 언어학의 성과 전체를 부정하는 과오를 저질렀다.

이번에는 스탈린의 위와 같은 주장은 언뜻 상당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물론 그 이면에는, **2)**에서도 드러나고 있듯이, 제2차세계대전 후 러시아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연방 체제를 공고히 결속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지만. 특히, **1)**은 확실히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볼로쉬노프의 사실적인 지적들과도 하등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정말 그럴까?

곰곰이 잘 따져 보면, 스탈린이 주장하는 **1)**의 내용은 민족어의 단일성과 공통성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으며, 동일한 언어 내의 방언적, 지역적, 계층적 변이들과 같은 다양한 차별적 양상들을 간과하고 있다. 반면, 볼로쉬노프의 사실적인 지적들은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스탈린 언어학의 문제점

그것은 우선 앞서 말했듯이, 언어를 단순히 기계적 유물론에 입각해서 도식화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주의의 촉구이자, 언어란 동일한 언어 공동체의 상이한 구성원들이 서로간의 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그리고 그 자체로 고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호 체계라는 자명한 사실에 대한 재확인 그 이상의 것도 그 이하의 것

도 아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실 확인과 더불어 볼로쉬노프가 제기하는 문제들은 스탈린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즉, 동일한 언어 체계를 다양한 개인들이나 상이한 집단들, 계층들, 계급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강조돼야 할 것은 민족어나 사회적 공통어의 단일성이 아니라 오히려 상이한 발화 주체들 사이의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대립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동일한 언어 기호를 사용하면서 거기에 자신의 고유한 이데올로기적 이해관계를 투영해야 하기에, 상이한 발화 주체들은 개인적이든 계급적이든 간에 어쩔 수 없이 첨예한 모순적인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언어 기호의 이데올로기적 사용과 그 효과에 있어서, 즉 발화의 층위와 담론 형성의 층위에서, 물질적 억압과 착취, 잉여가치의 획득을 위한 경쟁 등을 반영하는 상이한 이데올로기적인 목소리들은 필연적으로 상충적일 수밖에 없다.

언어에 대한 볼로쉬노프의 이상과 같은 문제들은 확실히 우리가 지난 번 글의 서두에서 밝혔던 의미에서 맑스주의적이다. 그리고 그것이 갖는 이론적, 실천적 함의는 역설적이게도 기계적 유물론이나 스탈린주의의 폐해가 역사적으로 판명된 오늘날에 와서 우리에게 더욱더 풍부하게 와 닿는다.

사실, 언어적 소통에서 화자와 청자 혹은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는 현대의 여러 가지 이론적 모형들에서 추상적으로 상정되고 있듯이 그렇게 상호대칭적인 것도 평등한 것도 아니다. 거기에는 많은 경우 사회의 다양한 현상들을 반영하는 지배나 억압의 관계들이 투영돼 있다.

만일 언어에 대한 맑스주의적인 관심이 이러한 것들로부터 나오는 이데올로기적 기만과 편견의 극복, 교묘하든 노골적이든 상징적 조작으로 점철된 권위적 담론에 근거하는 억압적 질서의 전복과 새로운 사회의 기획, 그리고 개성의 투명하고도 풍부한 소통적 발현을 지향한다면, 볼로쉬노프의 지적 노력은 이것을 위한 실로 유효한 실천적·이론적 첫걸음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

《사회이론의 역사》 알렉스 캘리니코스 지음, 일신사

사회학의 역사에 대한 맑스주의적 분석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사회이론의 역사》(원제: 《사회이론》)는 포스트모더니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불편해할 만한 책이다. 오늘날 학계는 포괄적 분석과 설명을 기피하고 세분화된 부문 연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캘리니코스는 계몽주의자에서 현대 사회학의 시조들을 거쳐 가장 최근의 이론가에 이르는 사회학의 역사를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캘리니코스는 최근 학계 풍토와 달리 다양한 사상들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지적한다. 예컨대, 독일 철학자 니체의 이론이 막스 베버의 이론을 거쳐 미셸 푸코나 자크 데리다 같은 포스트모더니스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추적해서로 연결시킨다.

한편으로 《사회이론의 역사》는 꿈의 교과라 불릴 만하다. 그러나 단순히 교과서로만 보서는 곤란하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캘리니코스는 맑스주의적 시각에서 당대 이론들에 비판적 논평을 해 왔다. 《사회이론의 역사》에 실린 논평 중



일부는 캘리니코스가 다른 저서에서 이미 자세히 다룬 것들이다.

예컨대,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장의 내용은 대부분 캘리니코스의 《포스트모더니즘 비판》에서 따온 것이다. 《사회이론의 역사》는 사회 이론 내 중요한 논

쟁과 개념들을 한눈에 개괄할 수 있는 큰 풍경화를 보여 준다.

마지막 장은 오늘날 사회 이론의 몇 가지 뜨거운 논쟁에 관해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캘리니코스는 앤서니 기든스와 올리버 벡의 최근 이론들을 상세히 분석한다. 기든스는 영국의 가장 저명한 사회학자이고 토니 블레어 전 총리의 어용 지식인이었다. 벡의 '위험사회' 개념은 독일 녹색 정치의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두 사상이 모두 '후기 근대성'이 자본주의 이전 단계와 뚜렷이 분리되는 새로운 단계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기든스는 블레어의 '제3의 길'을 열광적으로 환영했다. 벡은 역사유물론과 계급 정치가 한물갔다고 주장했다.

캘리니코스는 이런 입장의 오류를 체계적이고 명쾌하게 분석한다. 그 뒤 맑스주의의 유효함을 지적하며 책을 마친다.(이 부분은 좀 간략하다.)

《사회이론의 역사》는 주로 학계를 염두에 두고 쓴 책이지만 다른 사람들도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기든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학계에서 발전된 사상이 국가 정책의 영역으로 신속하게 보급될 수도 있다.

주류 정치문화에 깊이 스며든 친 시장 경제적 사고를 폭로하고 논박하려면, 그것의 이론적 뿌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회이론의 역사》는 이를 위해 필요한 무기를 제공한다.



영화 <안녕? 허 대짜 수짜님!>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어깨동무하기까지



영화는 인원감축에 반대하는 농성이 마무리되는 장면에서 시작한다. 2백 명을 자르겠다는 회사 측에 맞섰지만 비정규직 20명 감축으로 농성은 정리된다. 정규직 노조의 핵심 간부인 주인공 허대수는 “내가 비정규직 만 들었나? 나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한다.

한편 허대수의 딸 연희는 결혼할 남자를 데려오는데 그는 바로 대수 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세희. 허대수는 딸의 결혼을 막기 위해 갖은 궁리를 한다.

그러나 영화에는 허대수가 갈등하는 여러 계기가 등장한다.

딸은 비정규직 사위 맞기를 꺼려하는 허대수에게 “위선자”라고 쓰아 붙인다.

허대수는 딸을 단념시키려 세희를 만나러 가던 중 10년 전 회사를 그만 둔 동료 영조를 만나 가슴 시린 질책을 듣게 된다.

“누구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어렵다. 그런데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한다. 처음 노조를 결성할 때 대수 바로 내가 나한테 한 말이다.”

한편 비정규직 투쟁에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세희는 ‘굴뚝농성’을 결심한다. “우리 비정규직이 뭘 잘못했다고 자르는 것인지. 똑같이 일해도 단 한 번도 같은 대우를 못 받는 것이 너무 분해요. 저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 주고 싶어요.”

갈등 끝에 대수는 굴뚝에 올라가려는 세희에게 “노동자가 혼자하는 투쟁이 무슨 힘이 있냐”고 말한다. 그리고 회사 측과의 협상을 원점으로 돌리고 진전이 없으면 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다짐한다.

이런 통쾌한 장면이 더 많이 자주 현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은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망이기도 할 것이다.

영화는 허대수의 변화 과정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쇠를 갖고 있음을 보여 준다.

김어진

《안녕? 허 대짜 수짜님!》은 ‘인디스페이스’에서 8월 22일부터 상영 중이다.

(문의 : 노동자뉴스제작단 02-888-5123)



음반 <컬처 트리>, 아이앤아이 장단

레게와 한국 전통음악의 비빔밥

[원디시티 김반장의 최근 음악적 행보를 소개한다. 그동안 원디시티와 김반장은 반전집회와 촛불집회 등 사회 운동에도 열정적으로 참가해 왔고 감성적인 리듬으로 대중들에게 추천연색 “유기농 소울”을 선사해 왔다.]



원디시티가 새로 설립한 레이블 ‘비빔 프로덕션’의 첫 작품이며, 국내 유일한 덤[Dub : 특수 장비로 소리들을 섞어 환각적인 느낌을 만들어내는 음악형식] 밴드인 ‘아이앤아이 장단(I&I Djangdan)’(이하 장단)이 첫 미니앨범 <컬처 트리(Culture Tree)>를 발매했다. 레게 음악을 중심으로 한국의 전통음악과 전자 음악을 결합한 비빔밥 같이 ‘장단’이란 그릇에 버무려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켜 줄 밴드다.

첫 곡 ‘헤비웨이트(Heavyweight)’는 기운차게 자신들을 소개하고 포부를 밝히며 시작한다.

곧이어 앨범과 동명 타이틀인 ‘컬처 트리’에서는 장단의 음악적 감수성을 본격적으로 느낄 수 있다. 레게 음악을 심장 박동이라고도 하는데 이 트랙을 들으면 왜 그렇게 불리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앨범에서 가장 하드코어한 곡인 ‘아이 앤 아이 앤 아이(I and I and I)’는 트랜스 음악(전자 음악의 한 종류)의 리듬에 보컬 ‘장군’의 몽환적이며 힘 있는 목소리가 포인트인 곡이다.

넷째 곡은 이번 앨범의 타이틀 곡인 ‘아리 랑’(Irie Rang)이다. 한국의 대표적 민요인 아리랑을 장단의 느낌으로 재해석한 앨범이다. 퍼커션과 멜로디카를 맡고 있는 ‘스마일리’의 구슬픈 멜로디카와 중반에 등장하는 ‘장군’의 신명나는 팽과리가 별미인 곡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몸을 리듬감 있게 흔들게 해 줄 ‘헤비웨이트 버전(Heavyweight Version)’으로 앨범을 마무리한다.

물의 파장 같이 퍼지는 소리들 사이사이에 한 줄 한 줄 의미가득한 가사를 곹씹어 보며 끝없이 퍼져 나가는 파장의 흐름에 몸을 맡겨 보자.

정상권(원디시티 멤버, 퍼커션)

더 나은 삶을 위한 주요 요구들

물가 상승과 고용 불안정, 가계 부채 등으로 날마다 대중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게다가 경제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정책의 논리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 등 평범한 대중이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류 언론과 대다수 정치인도 대중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 위기의 심화와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신자유주의 공세로 대중은 두려움과 불안감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운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러나 아래 집약한 요구들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즉, 사람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체제의 논리에 도전한다. 그래서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항의 결집점 구실을 할 수 있다.

적어도 그러한 투쟁은 위기 상황에서 우익이 득을 얻으려 하는 것을 막는 보루가 될 수 있고, 지배자들과 사용자들 공세의 흐름을 역전시킬 수 있는 운동을 촉발시킬 수 있다.

물론 이 요구들 가운데 어느 것도 자본주의 체제에 명시적으로 도전하지는 않는다. 사실,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은 개혁주의자들이 옹호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 요구들을 성취하기 위한 노동자 투쟁의 논리는 자본가 계급 재산권의 토대를 약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자본가들과 우익의 반동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것이고, 그러면 노동자 투쟁은 양자택일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를 훨씬 더 근본적으로 침해할 것인가 아니면 자본주의적 우선순위의 복원을 마지못해 받아들이고 그에 따르는 고통을 모두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양자택일 말이다.

전환적

해결책이 혁명밖에 없는 매우 심각한 혁

명적 위기 상황에서조차 종종 노동계급은 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때 이러한 '전환적' 요구들이 노동계급의 현재 의식과 권력 투쟁 사이를 잇는 구실을 한다.

그래서 트로츠키는 우익이 쿠데타를 기도했던 1934년 2월 위기 이후 프랑스 행동강령을 내놓았다. 이때는 엄밀히 말하면 혁명적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1929년 대공황이 불러온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다. 단지 혁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했다. 거기서 더 나아가 대안을 정식 화해야 했다.

그러한 대안은 위기 대처 수단으로서 현명한 행동 방침이 될 수 있고, 개혁주의에 대한 대응일 뿐 아니라 근본적 사회 변혁을 향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트로츠키 정설주의자들의 환상과 달리 그러한 전환적 강령 자체가 노동자들의 의식을 바꾸지는 못한다. 노동자들이 해결책이 근본적 사회 변혁밖에 없음을 깨닫는

것은 강령을 이루는 요구들을 성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을 통해서다.

그러한 혁명적 투쟁은 활동가들의 즉각적 의제에 올라 있지 않다. 활동가들은 투쟁적 소수를 그러한 요구들 쪽으로 설득하는 데 당분간 주력해야 한다.

또, 그러한 전환적 요구들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투쟁을 자동으로 일으키지도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이러한 요구들을 둘러싼 토론을 통해 활동가들은 노동자 운동이 어떻게 위기 해결책을 강제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 자신들의 폭로·분석과 당면한 구체적 쟁점들 사이를 잇는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 제출하는 이 요구들은 토론을 위한 잠정적 시안으로 앞으로 더 보완될 것이다.

전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서 더 강화될 전쟁 위협과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다음의 요구들을 둘러싸고 공동의 대중 행동이 필요하다.

● 물가 통제와 물가인상률을 웃도는 임금 인상

고유가·고물가로 말미암은 노동자·서민의 고통 완화를 위해 물가를 통제해야 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 금리인상은 진정한 대안이 아니다. 그리고 물가인상률을 웃도는 임금 인상이 있어야 한다.

● 고용 안정과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 35시간 노동

모든 사람에게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직장폐쇄와 대량 해고를 단행하려는 기업은 공기업으로 전환시켜 노동자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실업자에게는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적절한 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 회원국 중 최장이다. 왜 어떤 노동자는 일자리가 없는 한편으로 다른 노동자는 잔업, 특근 등 장시간 노동으로 삶이 망가져야 하는가? 임금 등 노동조건을 후퇴 없는 주 35시간 노동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삶을 개선해야 한다.

● 비정규직 차별 폐지와 정규직화

전체 노동자의 무려 55퍼센트 정도가 저임금 무권리의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차별을 폐지하고 정규직화해야 한다.

● 최저임금 대폭 인상

현행의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형편없이 낮다. 적어도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

교사, 공무원,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이주노동자 등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하고, 필수유지업무제도 등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노동악법을 폐지해야 한다.

● FTA 반대

FTA는 단지 무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상품화와 시장

화를 경제 전체에 강요하려는 것이다. 대량실업, 비정규직 증대, 식품안전 위협, 환경파괴, 공공서비스 후퇴 등으로 대중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FTA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 투기자본 규제

투기자본의 활동은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금융위기를 부채질한다. 투기적 수익에 중과세하고 그 세수입을 복지로 돌려야 한다. 투기자본의 기업 인수합병과 금융투기를 규제하고, 투기자본을 양성하는 관련법을 모두 폐지해야 한다.

●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공서비스는 상품이 돼선 안 된다. 교육·의료·물·전기·가스·철도·금융·지하철·정유·통신·언론·우편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이미 민영화한 부분은 재국유화해야 한다.

● 모든 국민에게 국민연금 지급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에게 노후보장을 위한 충분한 소득원 구실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거의 절반이 국민연금 수급권이 없다. 모든 국민에게 급여가 지급돼야 하고, 그 부담은 국민연금 급여 대상자들의 노동으로 혜택

을 받은 정부와 기업이 져야 한다.

● 부동산 규제와 공공주택 확대

부동산과 주택이 생활에 필요한 거주지가 아니라 투기와 투자의 대상이 됐다. 그래서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은 요원하다. 부동산 투기와 투자를 강력히 규제하고, 저렴하고 질 좋은 영구 임대 주택과 국민주택을 충분히 보급해야 한다.

● 무상 의료

의료는 상품이 돼선 안 되고 예방, 치료, 재활 등 의료의 모든 분야가 무료로 제공돼야 한다. 이에 역행하는 영리병원 허용, 민영 의료보험 활성화 등 의료민영화는 중단돼야 한다.

● 입시 폐지와 무상 교육

초중고 학생들은 입시 경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입시 경쟁은 사교육비 폭등을 부채질하고, 자사고·특목고 등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대학 서열을 없애고 입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교육 재정을 대폭 증액해 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역행하는 등록금 인상은 중단돼야 한다. 대학 시장화와 기업의 대학 지배도 없어져야 한다.

●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누진세

정부는 대중의 요구에 대해 재원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 된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부세 등 직접세의 비중을 높이고 그 누진율도 올려야 한다. 유가 상승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정유사 등에도 중과세해야 한다.

● 제국주의 전쟁 반대

세계 패권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은 중단돼야 한다. 미국과 한국 정부 등의 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지에 대한 점령은 당장 중단돼야 하고, 파병 부대를 철수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지해선 안 되지만, 이를 빌미로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는 데는 분명하게 반대해야 한다.

● 친제국주의와 군국주의 반대

미국의 제국주의적 세계 전략에 협력하려는 전략 한미동맹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미국이 중동에서 벌이는 전쟁과 잠재적 경쟁자인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한국이 파트너가 된다면 한반도 평화도 크게 위협받을 것이다. 영구 주둔을 획책하는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

이미 남한은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한 국가 가운데 하나다. 징병제를 폐지하고,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한 군비증강도 중단해야 한다. 군비증강 예산을 복지 확충으로 돌려야 한다.

● 남북한 민중의 연대를 위해

남북한 지배자들은 수십 년 동안 남북 적대를 이용해 민중을 억압해 왔고, 화해를 시도할 때조차 민중의 삶은

안중에 없었다. 남한 민중은 외교 논리보다 북한 민중과의 연대를 우선해야 한다. 식량 지원이 대북 압박 수단이 아니라 굶주리는 북한 민중을 위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경제적·정치적 이유로 남한에 정착하려는 탈북자를 환영해야 한다. 또, 북한 인권을 빌미로 한 제국주의적 압박에 반대하면서도 북한 민중 스스로 민주적 권리를 쟁취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도 지지해야 한다.

● 민주주의를 위해

국가보안법, 집시법, 경찰력 강화, 인터넷·언론 통제 등 민주적 기본권을 가로막는 온갖 법과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사형제도 폐지해야 한다.

각종 보안 수사기관을 해체해야 하고, 수감 시설과 경찰·검찰·군대 등에 대한 공공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진정한 배심원제의 도입 등 사법제도의 민주적 개혁이 필요하다.

부패 공직자들을 소환할 수 있어야 하고 부패 기업은 공기업화해야 한다.

● 여성과 소수자 차별 반대

여성·이주자·장애인·동성애자 차별 등 부당하며 운동을 분열시키는 온갖 차별에 반대해야 한다.

여성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아야 한다. 국공립 보육시설이 대폭 확충되고 무상 보육이 이뤄져야 한다. 낙태금지법, 간통죄 등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법률도 모두 폐지돼야 한다.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출입국과 취업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이주자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정치적·사회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지구 온난화 중단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경제 체제는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에 의한 재난을 일으키고 있고, 이는 더욱 엄청난 재앙을 부를 것이다. 핵 에너지는 진정한 대안이 아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한다.



포럼에 초대합니다

대학 맑스주의 포럼

러시아·그루지야 전쟁, 신냉전이 도래하는가
조명훈<저항의 촛불> 기자)
9/11(목) 오후 6시 30분
중앙대(추후 공지)
문의 011-9875-4790
참가비 1천 원

문의 016-546-5560
참가비 없음

자유무역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까?
김어진(다함께 반신자유주의 활동가)
9/4(목) 오후 6시 30분
고려대(4.18 기념관 B104호)

맑스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한국사회
정병호(다함께 운영위원)
9/10(수) 오후 6시 30분
이화여대(추후 공지)
문의 010-2263-1106
참가비 2천 원

지역사회포럼

서울 북부 사회포럼
747 파산과 경제 위기 — 원인과 해법
강동훈<저항의 촛불> 기자)
9/5(금) 오후 7시 30분
성북도서관 성북세미나실(6호선 상월곡역 4번 출구)
문의 010-5544-4285
참가비 2천 원

서울 남부 사회포럼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윤병선(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부소장)<이윤에 굶주린 자들> 공역자/건국대 충주캠퍼스 경제학과 교수)
9/4(목) 오후 8시

서울교대 학생회관 2층 뒤탈마루
문의 010-8181-4800
참가비 2천 원

서울 중부 사회포럼
이명박은 왜 언론을 통제하려 하는가
강철구(다함께 활동가)
9/3(수) 오후 7시 30분
임호빌딩 702호(중로5가역 2번 출구 이화예식장 옆)
문의 010-2519-1987
참가비 2천 원

서울 서부 사회포럼
부시의 또 다른 수렁 — 아프가니스탄
김용욱<저항의 촛불> 공동편집자)
9/4(목) 오후 8시

신촌 아트레온 14층 토즈
문의 016-785-4957
010-5232-1905
참가비 2천 원

인천 사회포럼
자유무역은 경제 위기의 대안인가
9/3(수) 7시 30분
인하대(추후 공지)
문의 010-5571-1917

전주 사회포럼
경제 위기의 원인과 대안 — 자유무역이 경제 위기의 대안인가
9/10(수) 오후 7시
장소 추후 공지
문의 011-9065-8806



다함께에 가입하세요!

활동 소개 및 안내, 회원가입, 후원하기 등 각종 문의 사항은
02-2271-2395 또는 atgmail@nate.com 으로 연락주세요.
다함께가 주최하는 포럼이나 강연회, 거리 가판에서도 얼마든지 물어 봐 주세요.

대기업들이 광고주인 주류 언론은 진실을 은폐합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는 개인이라면 강력히 저항할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함께는 이 사회의 감춰진 진실을 알리기 위해 주간 <저항의 촛불>을 발간하고, 다양한 주제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또한 거리와 대학에서 홍보전을 벌이고 대중 행동에 함께하면서, 자본주의가 낳는 온갖 불의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명박에 맞선 저항이 승리하기 위해선 토론을 통해 효과적인 방법을 논의하고 함께 실천하는 단체가 필요합니다.

다함께에 가입하셔서 여러 활동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참여해 보세요.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길에 함께합시다!

후원 계좌 : 국민은행 694701-01-227958(예금주 : 백은진)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www.alltogether.or.kr

‘다함께’는 1995년 프랑스 공공부문 총파업과 2000년 프랑스 니스에서 있었던 국제 반자본주의 시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구호였던 ‘투장상블’(Tous Ensemble)에서 따온 이름으로, 다양한 운동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주간
<저항의 촛불>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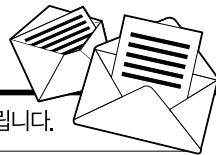


6개월_2만 5천 원
(신문값 20,000원 + 우송료 5,000원)

1년_5만 원
(신문값 40,000원 + 우송료 10,000원)

웹사이트에서도 정기구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www.resistcandle.com reader@resistcandle.com

전화 : 02-2271-2395
계좌 번호 : 국민 048402-04-014849(예금주 백은진)



9월 1일(월)까지 독자편지를 보내 주십시오. 지면 관계상 실리지 않는 독자편지나 소식/보고는 온라인에 실립니다.

여러분의 기고와 편지를 환영합니다.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한 사제의 소명과 교회권력의 소명

지난 8월 21일 천주교 서울대교구(교구장 정진석 추기경)는 정의구현사제단 대표 전종훈 신부에게 ‘이례적으로’ 안식년을 통보했다. 10년 정도에 한 번씩 받는 안식년이기 때문에 2002년 안식년을 보낸 전 신부에게 다시 쉬라는 것은 사실상의 징계처분이라는 의혹을 주기 충분하다. 한 번 부임지가 결정되면 3~4년을 활동하는 것에 비추어 지난해 2월 수락산 성당 주임신부로 발령이 났던 전 신부에 대한 안식년 통보는 이례적이어도 보통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

교회권력은 이전부터 평택미군기지 반대, 삼성비자금 폭로 등과 같이 굵직굵직한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정의구현사제단의 활동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실제로 전 신부는 삼성비자금 폭로 직후 정진석 추기경에게 불러 갔고, 이번 촛불집회 중의 시국미사와 관련돼 교구청의 호출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교회 내부에서 공공연하다. 그 이전 정 추기경이 교구장으로 있었던 청주교구에서는 정의구현사제단 공동대표와 소속 신부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해외로 나가야 하는] 교포사목으로 발령받은 적이 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실천을 따르고 널리 퍼뜨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소명을 가진 존재가 아닌가. 지

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 착취, 차별, 가난 등 사회 권력의 횡포들 속에서 조용하던 교회가 그나마 그에 대해 저항하는 활동을 하는 신부에게 이례적인 인사발령을 내린 것은 석연찮다. 예수를 세 번씩이나 부인하던 베드로의 형상이 지금의 교회권력에 오버랩 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어찌되었든 여러모로 이상한 인사발령을 ‘그저 일상적인 인사발령’이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전 신부가 담당했던 소임을 앞으로는 교회권력이 적극적으로 맡아

촛불 미사를 진행하는 전종훈 신부(가운데)

수행해야 한다. 그 소임에 대해서는 전 신부의 사제관에 걸려있는 류리엘 레스터의 글이 대신해서 말해 준다.

“평화운동가의 일이란, 전쟁을 멈추게 하는 것, 세계를 평화하는 것, 세계를 가난과 지나친 부에서 건져내는 것, 병든 이를 치료하는 것, 슬픈 이를 위로하는 것, 아직 하느님을 모르는 이를 일깨우는 것, 가는 곳마다 기쁨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 그리고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한테서 하느님을 발견하는 것이다.”

백승덕(가톨릭학생회 회원)

방한한 후진타오는 이명박처럼 후진 자다

중국 국가주석 후진타오가 한국을 방문해서 이명박과 정상회담을 하고 돌아갔다. 그는 이명박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대중을 억압하는 지배자다.

그는 티베트 자치구 총서기 시절 티베트인의 반란을 진두지휘해 진압하기도 했다. 그리고 1989년 톈안먼 항쟁 때 진정한 민주주의를 요구했던 중국인들을 덩샤오핑이 학살할 때도 이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덩샤오핑과 장쩌민은 후진타오를 후계자로 삼은 것이다. 또한 후진타오는 최근에 일어난 티베트인들과 위구르족의 정당한 독립운동을 무력 진압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그가 장쩌민과 달리 평범한 중국인들의 삶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인터넷을 통해 네티즌과 소통하기 때문에 다른 지도자들과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이번에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서 아이들이 부른 조국찬가가 실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과 개막식 당시 한족을 소수민족인 것처럼 분장시킨 것에 대한 중국 네티즌들의 항의에 대해 관련 인터넷 토론방을 폐쇄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또 정부 고위층 자체가 평범한 시민들을 차로 치어 죽인 것을 법원이 처벌하지 않아 촉발된 구이저우 시민들의 시위를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올해 초에 중국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내용으로 만든 신노동계약법 조차 중국과 해외 자본가들의 압력을 받아서 그 내용이 크게 개악된 바 있다. 서남지역 경제개발을 명목으로 장강은 물론 황해의 생태환경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썩사댐을 건설하고, 핵 발전을 추진하며 환경도 파괴하고 있다.

후진타오는 이번에 이명박을 만나서, 신장 위구르 독립운동 탄압의 명분인 ‘테러와의 전쟁’에 서로 협력하고,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양국 국민들의 삶을 파괴할 한중 FTA 등에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이명박과 그의 또 다른 친구 후진타오의 이런 계획에도 반대해야 한다.

김재원

촛불의 대의를 지키며 싸우겠습니다

저는 촛불집회에 참가해서 발언 등을 했다는 이유로 소환장을 받은 부산대 학생이며 다함께 회원인 정성휘입니다. 저는 세 차례 출두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며, 고개 숙이던 저들이 이제 와서 촛불의 대의를 짓밟으려 하는데 그에 순순히 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수많은 사람들처럼 저도 촛불 운동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부산에서도 청소년 수천 명이 거리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팻말을 만들고 선전물을 만들며 놀라운 창의력과 활기를 보여 주었습니다. 대학생들은 동맹휴업으로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거리에 나서자는 구호가 나왔습니다. 난생 처음 겪은 1백만 명이 참가한 촛불집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흥분되는 경험이었습니

다. 그런데 그렇게 크고 아름다웠던 촛불의 목소리가 이명박 정부에게는 눈엣가시 정도였나 봅니다. 눈치를 살피며 사과했다 사기쳤다 반복하던 이명박 정부는 이제 그야말로 공안 탄압에 열중입니다. 백골단과 색소 넣은 물대포 얘기는 이제 이 정부가 갈 데까지 간 것이 아닌가 묻게 됩니다.

0교시 수업이 없는 학교, 이윤보다 건강을 위한 밥상, 돈이 없어도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같은, 새로운 희망들이 거리에서 피어났습니다. 백골단과 물대포에도 또 다시 거리로 나오는 투지와 용기를 우리는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가 저에게 체포영장을 내리고 수배의 몸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촛불의 대의를 지키며 싸우고자 합니다. 재벌과 부패 범죄자들은 모두 사면하면서, 시민들은 짓밟으려 하는 이명박 정부는 저를 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촛불이야말로 역사의 이름으로 이명박 정부를 심판할 것입니다.

정성휘

맑스주의 철학 재정립을 위한 디딤돌, 볼로쉬노프

이기웅 교수의 ‘맑스주의와 언어’ 기고문은 명쾌하고 흥미롭고 신선한 자극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감히 한두 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볼로쉬노프의 출발점은 언어가 ‘개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사회’ 현상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는 소쉬르와 달리 언어의 가변성을 강조했다. 구조주의자 소쉬르는 언어를 고정 불변의 법칙들의 체계로 봤다. 물론 볼로쉬노프도 언어에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언어의 유동성도 결코 간과

하지 않았다.

가령 처음에 ‘진보’라는 용어가 소심한 온건 좌파 지도자들이 ‘좌파’라는 말의 대용어로 수세적으로 사용한 데서 비롯했다 해도, 그들과 주류 언론·정당이 ‘진보’라는 말을 ‘사회민주주의’의 대용어로 사용하는 게 보편화된다면, ‘진보’는 좌파 일반이 아니라 단지 사회민주주의적 개혁주의만을 가리키게 될 것이고, 사회민주주의적 개혁주의 왼쪽의 진정한 좌파들은 ‘진보’라는 말의 사용에 신중하게 될 것이다.

언어의 유동성 문제는 계급의식에 대한 맑스주의 이론에 큰 함의를 갖는다. 언어가 의식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일진대 만일 언어가 고정 불변이 아니라 유동적이라면 계급의식도 가변적이라는 뜻이 된다.

볼로쉬노프가 언어의 유동성과 가변성을 강조했다 해서 그를 포스트구조주의의 언어 이론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포스트구조주의자는 낱말 의미의 불안정성을 단언 강조했다. 포스트구조주의자의 논의 속에서 언어는 안정성이 무

시되고 의미가 파괴돼 버렸다. 그러다 보니 포스트구조주의자들의 언어 이론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렸다. 가령 아무리 ‘민족’이라는 말의 뜻이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도 어떤 쓰임새에서든 민족 담론은 계급과 계급투쟁의 현실을 은폐하는 구실을 한다.

볼로쉬노프의 《언어와 이데올로기》는 스탈린주의와 학술주의로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사상을 혼란시킨 루이 알튀세르의 유산을 청산하고 루카치 이래 고전 맑스주의의 진정한 철학적 전통을 재정립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최일봉



주간연속2교대와 금속 노동자 투쟁의 과제

올해 금속노조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 심야노동 철폐를 위한 주간연속2교대 실현 등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산별 교섭과 투쟁을 시작했다. 하지만 금속노조 조합원의 60퍼센트 이상이 속해 있는 자동차 4사(현대·기아·대우·쌍용) 사측은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금속노조 지도부는 이에 맞선 투쟁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기보다는, 내년부터 산별교섭에 참여하겠다는 대우차 사측의 '확약서'를 인정하며 중앙교섭을 서둘러 끝내 버렸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금속 최저임금도 요구 수준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내용으로 합의해 버렸다. 주야 12시간 맞교대를 하는 자동차 노동자들의 간절한 소망인 주간연속2교대 문제는 아예 합의 사항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물론 일부 성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중요한 쟁점들은 지역지부와 기업지부로 떠넘기는 형태로 마무리된 것이다. 이틈을 이용해 이명박 정부는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을 긴급체포해 구속시키고 체포 영장이 발부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산별 중앙교섭이 마무리된 지금 주간연속2교대 실현과 개별 사업장의 비정규직 차별 철폐 투쟁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현대·기아차 지부다.

그런데 현대차지부 윤해모 지도부는 실질적인 파업 투쟁 한번 제대로 조직하지 않고 대폭 양보(자유로운

현대차 대의원들이 사측과 노조의 주간연속2교대 세부 시행안에 반발해 교섭장을 막고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전환배치와 임금 삭감, 비정규직 처우 문제는 배제)하는 내용으로 사측과 주간연속2교대를 잠정합의해 버렸다. 이에 현장 대의원과 조합원들은 재교섭을 요구하며 교섭장 봉쇄 투쟁을 전개했다.

이런 아래로부터 압력에 밀린 윤해모 지도부는 다행히 8월 26일 재교섭을 선언했지만 실질적인 파업 투쟁을 조직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주간연속 2교대를 관철시키는 힘들 것이다.

기아차 김상구 지도부 역시 여름 휴가 이후 현대차지부의 눈치만 보며 '성실교섭'을 핑계로 파업을 계속 회피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 대공장 지부에서 파업 투쟁을 회피해서는 물가 인상을 뛰어 넘는 임금 인상과

온전한 주간연속2교대제를 노동조건 후퇴 없이 실현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금속산업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한 주간연속2교대 실현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현대·기아차 현장 대의원, 활동가들과 부품·하청 노동자들의 아래로부터 연대를 강화해 실질적이고 강력한 파업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다.

또한 정갑득 위원장 석방과 지도부에 대한 체포 영장 철회를 위한 투쟁을 더욱 강력히 벌이는 것이다. 그래야 이명박 정부의 공안탄압을 막아내고 금속노동자들의 꿈인 심야노동 철폐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관철할 수 있다.

김우용

(기아차지부 소속 금속노조 중앙위원)

부당 해고에 맞선 또 한 번의 의미있는 승리

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2년 이상 상시 지속적 업무를 담당한 비정규직들이 별정직으로 전환될 때, 민주노동당 활동을 이유로 전환에서 제외되고 해고까지 당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단 이사장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므로 직원의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인사규정을 두고 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6일 국가인권위는 이사장에게 정당 가입 및 활동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나에 대한 별정직 전환 심사 절차를 재개할 것을 권고했다.

공단 측은 지난 6월에도 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 결정 때문에 나를 어쩔 수 없이 복직시켜야 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나에게 업무를 주지 않고 관리자 주도로 집단따돌림과 비난을 퍼부어 왔다. '잘난 척 그만하고, 공단에 먹칠 그만하고, 계속 다니려면 (민주노동당을) 탈당해라', '잘못했다고 속이지 않으면 공단에 있는 동안은 편치 않을 거다.', '(성향이 오면) 화합이 안 되니 공단 체육행사에 오지 마라' 등등.

그러나 일부 정규직 동료들은 공단 측의 처사에 분노하면서, 친동기 간에도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세심하게 나를 챙겨주고 있다. 덕분에 나는 고립돼 싸우는 노동자들을 미쳐버리게 한다는 집단따돌림에도 그럭저럭 버티고 있다.

국가기관의 권고도 나온 마당에, 정규직 노동조합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 실제로 정규직 조합원들 중에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당원들은 이번 권고에 대단히 기뻐했다.

노동자들이 차별 논리에 반대하고, 강력하게 단결할수록 노동조건 개선은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공단 정규직 노동조합이 개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공공노조 서울본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과 함께 별정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준비하고 있다.

성향아

부산에서도 계속되는 촛불

지난 8월 23일 부산 서면에서 촛불이 밝혀졌다.

부산에서는 "사회만 보면 바로 잡아 가고" 최근 수배자도 생겼다. 그럼에도 이 날 1백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했다. 이명박의 촛불 꺼뜨리기 시도가 부산 시민들의 분노까지 꺼뜨릴 수는 없었던 듯하다.

이 날 발언한 청소년, 네티즌, 청년은 모두 어청수의 막가파식 폭력에 분노했고, '될 때까지' 촛불을 계속 들자며 한 목소리를 냈다.

예비군복을 입은 네티즌은 "서

울 집회에서 최루액이 섞인 소화기를 맞고 피부가 가려워 3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병원에 다니고 있다"며 "무조건 끝까지 촛불을 들자"고 말했다.

동의대 한의대 노래패는 '다시 광화문에서'를 부르고, "서면 거리를 [부산의] 광화문으로 만들자"고 말해 박수를 많이 받기도 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도 부산에서 촛불문화제가 열린다. 우리는 전국의 촛불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촛불을 들 것이다.

강민선

촛불을 비난한 지역 언론사를 굴복시키다

경기·수원지역 단체들이 연대해서 촛불을 비방한 지역 언론을 굴복시킨 고무적인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경기신문〉은 지난 5월부터 사설에서 촛불 항쟁을 맹비난했다. 촛불 항쟁에 대해 "상대적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중고생들이 대거 참가"했고 촛불들이 "광화문과 폭도"라고 모함하는 '쓰레기' 사설이 난무했다. "좌파세력이 '광우병 괴담'의 진원지"라거나 '다함께' 주최의 맑시즘2008 행사에 대해서도 촛불 수배자들이 법망을 비웃으며 생중계로 "급진 사회주의 포럼"에서 연설한다며 다함께와 촛불 수배자들에 대한 마녀사냥을 선동

했다.

5월 22일 항의 면담 등으로 〈경기신문〉의 '쓰레기' 사설에 항의해 온 경기·수원지역 단체들은 8월 13일에는 31개 단체들이 공동으로 지면 사과와 문제 사설을 쓴 객원논설위원 정행산의 교체를 요구했다. 그리고 요구가 묵살되면 〈경기신문〉의 모든 취재요청을 거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 결과, 〈경기신문〉은 19일 열린 임시주총에서 객원논설위원 정행산의 해촉을 결정했다. 조갑제 같은 자를 지역 언론에서 OUT시킨 통쾌한 승리였다.

김진석

맑시즘2008에 참가하고 나서

사회의 약자와 약자에 대한 억압은 오래전부터 관심있던 주제였다. 그래서 다양한 집회에 드문드문 참가했다. 그러다 알게된 것이 '다함께'였다. 다함께가 주장하는 반신자유주의, 반제국주의 등에 찬성하는 바이기에 가입을 고민해 왔다.

그러다 맑시즘2008에 참가하게 됐다. 맑시즘2008은 다양한 주제의 토론들이 있

었고 사실 조금 어렵기도 했지만 이전까지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하던 나에게 새로운 자극과 재미를 줬다. 조금씩 다른 주제의 토론들이었지만, 다함께의 활동들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맑시즘2008이 가지는 의미는 더 크다고 생각했다. 정부와 기업의 지원 없이 시민과 연대의 모금으로만 운영하면서도 규모와 깊이

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꺼리는 주제들을 들추어 고민하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맑시즘2008은 부제 대로 '촛불들의 축제'였다. 앞으로 더 즐거운 활동들과 맑시즘을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 그러기에 나도 이명박 시대에 저항하는 작으면서도 강력한 맞불, 다함께를 든다!

이슬비(제천 간디학교 학생)

※맑시즘2008에 대한 전체 보고는 <저항의 촛불>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진 : 기륭전자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 주최의 단식 노동자 지지 집회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희망을 지키겠습니다”



아래 글은 얼마 전 다함께가 주최한 진보 포럼 앞시집2008에 참가한 기륭전자 노조 최은미 조합원이 특별 발언한 내용을 축약 정리한 것이다. 앞시집2008에서는 80여만 원의 기륭 노동자 투쟁 연대 기금을 모금해 최은미 조합원에게 전달했다.

1천 일 동안 정말 외롭게 싸웠지만 저희가 옳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연대해 준 고마운 분들에게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는 희망을 보여 주기 위해 정말 힘들게 버텨 왔습니다.

광우병이 걸린 쇠고기가 먹고 싶지 않다고 시민들이 촛불을 들면서 저희 투쟁 또한 시너지 효과를 많이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이 전국적으로 퍼지던 4~5월부터 저희가 집회만 하면 지역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생수나 음료수 같은 것을 사 주면서 힘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우병 쇠고기를 반대하는 광화문 촛불 덕분에 비정규직 투쟁이 상승 효과를 함께 타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1천 일 동안 저희가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것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돈으로 정리하거나 비정규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고용·정규직화를 반드시 파내자, 그 원칙이 아니면 어떻게까지 힘들게 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승 효과

그러나 단식 농성 동안 교섭이 재개되면서 저희가 처음으로 그 원칙을 깨트렸습니다. 단식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3의 회사도 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내용이 나오면 나올수록 후회하더라고요. 신설회사로 가서 일을 하라고 하고, [고용을] 1년만 보장해 주겠다고 하고, 지금 농성하고 있는 조합원 10명만 받아 주고, 그 외의 조합원은 받아줄 수 없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는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낫겠다고 정말 대성통곡을 하면서 교섭

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속노조가 기륭 문제를 전면적으로 받아안고 투쟁하고 다 책임질 테니까 제발 소중한 생명부터 살리자고 권고를 하셨고요. 무엇보다 두 단식자가 몸무게가 30킬로그램대 중반이고 혈당이나 혈압이 너무 낮아 언제 쇼크로 사망할지 모르는 수준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분회장님께서 병원에는 가되 단식은 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김소연 분회장은 8월 26일 현재 77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륭전자 앞에서 매일 밤마다 촛불도 꺼트리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속노조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결의를 보여 주고 이후 집중집회를 계속해서 잡아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도 이 기세를 몰아서 승리하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생각입니다.

‘일터의 광우병’ 비정규직이라고 하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광우병 쇠고기 안 먹으면 그만 아니냐고 하지만 피해갈 수 없잖아요? 비정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파견이 아니면 취업하기도 어려운 시대, 저희가 다 바꿔 나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 희망이라도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철폐하기 위한 촛불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 쬔으면 좋겠습니다.

KBS 낙하산 사장 저지 투쟁

“촛불 앞에 부끄럽지 않게 싸우겠습니다”

이명박의 방송 장악과 인터넷 재갈 물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조중동 광고 중단 운동을 해 온 인터넷 카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네티즌 2명을 구속했고, KBS 낙하산 사장 임명도 강행했다. 이명박은 KBS 노동자들과 촛불의 저항 때문에 마지못해 김인규와 김은구 카드를 접었지만, 대신 이병순을 낙하산 사장으로 임명했다. 이명박의 방송 장악에 맞서 앞장서 싸워 온 ‘공영방송사수 KBS 자원행동’의 양승동 대표를 인터뷰했다.



KBS이사회는 MB의 방송 장악 선봉대 노릇을 하며 온갖 탈법을

저질렀습니다. 불법적으로 경찰력을 요청하기도 했지요.

유재천 이사장이 청와대 인사와 만나 신임 사장에 대해 사전 모의한 것은 KBS이사회가 청와대의 거수기에 불과함을 보여 준 것입니다.

청와대와 보수 언론은 신임 사장 이병순이 KBS 사상 ‘최초의 KBS맨’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사회에서 임명 제정한 사장은 KBS 출신이라 하

더라도 낙하산이라 규정할 수밖에 없지요. ‘청부사장’ 이병순은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할 게 뻔합니다.

‘청부사장’

KBS 조합원들은 낙하산 사장 저지 총파업에 85퍼센트 이상이 압도적으로 찬성했습니다.

KBS 노조 집행부는 조합원들과 시민들의 열망을 받아안아 즉각 파업에 돌입해야 했습니다. 그

러나 유감스럽게도 노조 집행부는 이병순은 낙하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신임 사장 이병순은 프로그램과 뉴스를 정권 입맛에 맞게 바꾸려 할 것입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도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권에 비판적인 진보적 프로그램들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방송 독립을 위해 계속 투쟁할 것입니다.

이병순 신임 사장 첫 출근부터 출근 저지 투쟁을 할 계획입니다.

노조에 임시 조합원 총회 소집도 요청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조합원 3분의 1의 서명을 받아 총회 소집을 공식 발의할 것입니다.

투쟁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외압에 굴복하는 영혼 없는 방송인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6월 11일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KBS 앞으로 왔습니다. 그 촛불이 KBS 직원들을 각성시켰습니다. 우리는 그 촛불들이 꺼지지 않게, 촛불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싸워 나가겠습니다.

인터뷰 · 정리 강철구